

2022년 NCCK 교육포럼

“교육은
이다”
- 경쟁없이 배우는 세상을 향해

2022. 8. 23.(화) 오후 2시 30분



줌 링크 <https://url.kr/rpsbk9>
ID 238 242 5962 PW ncck1008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채널
생중계 youtu.be/Yya4sU9Z2W0

주관·주최: NCCK 교육위원회

2022년 NCKK 교육포럼

“교육은 □□이다” - 경쟁 없이 배우는 세상을 향해

사회 박경양 (NCKK 교육위원장)

목 차

발제 1	교육 공위空位Interregnum의 시대, 경쟁을 넘어 공존의 시대를 향한 새 교육은 가능한가? 하태욱 (신나는학교 교장 / 건신대 대안교육학과 대우교수)	4
발제 2	한국 교육의 현실과 극복 방안 한만중 (전 서울 교육청 정책기획관/한국교육정책연구원 이사)	16

지정토론 1	한국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적 공동체교육에 대하여 김지원 (NCKK 교육위원)	43
지정토론 2	경쟁이 아닌 협력 교육, 입시 폐지가 답이다 이운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51
지정토론 3	경쟁교육은 사회문제로 규정해야 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54

발제 1

교육 공위^{空位Interregnum}의 시대, 경쟁을 넘어 공존의 시대를 향한 새 교육은 가능한가?1)

하 태 옥

(신나는학교 교장 / 건신대 대안교육학과 대우교수)

1. 공위의 시대와 교육공위

The crisis consists precisely in the fact that the old is dying and the new cannot be born; in this interregnum a great variety of morbid symptoms appear.
위기란 명백히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못했다는 데서 만들어진다. 이 지체의 시간(공위)속에 엄청나게 다양한 병적 증상들이 나타난다.

- 안토니오 그람시 <옥중 수고> 중에서

공위^{空位Interregnum}는 사전적으로 정권의 이양기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권위를 지닌 정부가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는 ‘대공위^{大空位Great Interregnum}’ 시대라 하여 교황과 제후들 간의 권력갈등이 극심했던 20여년(1254~1273)의 공백기를 지칭하기도 한다. 신성로마제국 초기에는 황제와 교황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교황의 신권에 기대어 황제의 권위가 보장받았다. 그러나 이슬람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을 통해 서유럽을 단결시켰던 십자군 원정이 성과 없이 흐지부지되고 유럽사회가 내부적으로 안정되면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교황권을 넘어 세속적 권력의 확장을 원했다. 특히 프리드리히 2세(1194~1250)가 교황의 영토였던 로마까지 진출하려고 하자 이 갈등은 극에 달아서 급기야 교황은 황제를 파문하게 되었다. 그 틈을 노린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신성로마제국은 결국 급격하게 붕괴된다. 프리드리히 2세가 거둬드는 반란 속에 시달리다 죽고, 그 아들 콘라드 4세는 황제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4년 만에 사망하게 되면서 신성로마제국은 20여 년간 황제 없는

1) 본 원고는 「2021 대안교육학회 창립 준비 1차 세미나」(2021.의 토론문을 기초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어떤 제후도 새로운 황제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굳이 힘도 권위도 없는, 반란에나 시달릴 허울뿐인 황제가 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황 또한 황제란 더이상 자신의 신권 수호자가 아닌 세속적 권력의 경쟁자였으므로 이 공백기가 크게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황제 자리의 공백은 혼란의 시대를 불러왔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반란이 끊이지 않았고 노략과 약탈은 일상화가 되었으며 교회와 교황 역시 그 피해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교황은 새로운 황제를 선출해달라고 제후들에게 호소하기에 이르렀고 루돌프 1세가 등장함으로써 합스부르크 왕가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사회적으로 가져온 것은 바로 이탈리아의 사상가이자 혁명가인 안토니오 그람시였다. 한 시대의 권위를 누렸던 어떤 제도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관성에 의해 굴러가고 있으며, 그것을 대체 할 새로운 권위는 탄생하지 않고 있는 지체의 시기, 기존의 권위가 무너졌지만 새로운 권위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과 불확실 속에서 공포에 기반한 병적인(Morbid) 현상들이 저마다 나름의 권위를 주장하며 돌출하여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혼돈의 시대가 온다고 지적했다. 이 공위의 시대를 21세기에 다시 호출한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렇게 지적한다. 과거의 위험은 외부로부터 오면서 매우 선명하게 보였으나 현대는 사람들이 위험을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다고. 성장의 변영에 익숙해져서 쫓아가다보면 느닷없는 몰락이 기다린다. 결국 빛으로 빛을 갚는 파산의 시대가 닥쳐온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문제는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개인은 이를 극복할 힘이 없다. 기댈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린 속에서 개인들은 값싼 위로나 허황된 환상에 휩쓸린다.

교육의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바이러스의 유탄을 정통으로 맞은 곳은 바로 교육계였는데, 전 세계 학교들이 물리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학교 휴교 사태가 진짜 문제는 아니었다. 학교를 문 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진정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이었는가?’하는 학교의 효용성 문제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는 방역을 위한 일시적 행위로서 학교를 ‘잠시 멈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학교를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필요로 한다면 그 필요는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공위와 관계되어 설명될 수밖에 없다. 약 150년 전 근대 산업혁명과 함께 근대적 교육체제로 시작된 학교는 그 이전 시대 개인적으로 혹은 종교적 목적에 의해 운영되어져 왔던 교육체제를 ‘학습의 대량생산 체제’로 형성해왔다. 단순히 생산수단을 위한 경제적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신분중심의 중세 사회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와 평등의 근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능력주의사회 구현의 핵심 제도로서 학교는 배움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해왔다. 즉, 부모의 신분에 의해 나의 삶이 결정되던

봉건제 사회에서 얼마든지 ‘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는’ 능력사회로 변화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학교라는 제도가 맡게 되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였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었으며,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이었다. 학교의 신화는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교육의 권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달이 심화되고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개천에서는 더 이상 용이 나오지 않고 옥만 나오는’ 현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부모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자본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모든 물질·인적·문화적·정보적 자본을 총동원한다. 이런 사실을 개탄하면서도 여전히 청(소)년들에게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환상으로 노력을 넘어선 ‘노오력’²⁾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의 비대한 성장은 바로 이 두 가지 상호모순된 현실인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까지 덧붙인 공포마케팅의 결과다. 심지어 공교육의 회복과 사교육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는 방식조차 사교육에 기대게 되었다. 한국 사회 사교육 담론의 변화를 시대적으로 고찰한 강태중과 강충서의 연구³⁾는 사교육 관련 정책이 공교육을 바로 세움으로써 사교육이 필요 없는 상태를 지향하기보다 오히려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선택하였다고 지적한다. 즉, 공교육이 혁신됨으로써 사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안에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현행 방과 후나 돌봄 교실, 심지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상당수 운영 형태 역시 학교 안에서 사교육 수요를 보장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히 ‘공공형 사교육’이나 ‘마을형 사교육’으로 불릴 수 있다. 보다 노골적인 형태도 있다. ‘지역 인재’를 기르겠다는 지방 학교는 아예 대놓고 사교육 강사들을 초빙하여 입시의 결과를 내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가장 중심까지 진출한 것이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최근의 흐름 역시 유사하다. 온라인 개학의 시대를 맞아 교사들은 맨몸으로 온라인사교육기업에 맞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가장 손쉬운 전략은 사적 콘텐츠를 공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어느 지자체에서는 동네마다 ‘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사교육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공공 독서실을 설치하는 것이 검토되었다고 한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커진 격차를 어떻게든 줄여 보겠다는 교육지책이었는데 보다 노골적인 경쟁구조의 강화인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적 욕망을 부추긴다는 근본적 문제 제기를 피해 가기는 어렵다.

교권 추락도 당연한 수순이다. 근대학교가 권위를 잃었으니 교사도 권위를 세우기 어렵다. 교권 추락은 교육 공위의 시대가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근대 학교에서는 더 이상 교육의 권위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 시장이 새로운 ‘권위’를 얻을 수는 없다.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교육 시장 속에서 힘을 잃고, 역량 중심 교육

2) 조한혜정 외(2016), 《노오력의 배신: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창비.

3) 강태중·강충서(2013), 〈사교육 담론에 담긴 학교 교육의 의미 역사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23(4), 1~28쪽.

과정에 대한 논의는 지식에 대한 본질주의적 접근으로 희미해지고 있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치밀한 노력, 부의 대물림을 위한 정교한 전략 속에서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대표되는 신경쟁력의 기능주의적 개혁론도 출몰한다. 바야흐로 교육의 공위 시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공위(空位)를 넘어 공위(公位)로 새로운 교육의 전망

그러니 우리는 ‘공교육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없다. ‘공^公’교육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통해 제공하는 교육이며 그 공적 목표는 공적인간, 즉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최근 ‘민주시민교육’이 서구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런 공교육의 공적가치에 대한 고민이 녹아들어있다. 그러니 새로운 교육의 ‘시민성’을 고민하지 않고서 우리는 공교육의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없다.

2020년 ‘미래교육과 미래학교’라는 키워드로 3개의 각각 다른 연구⁴⁾를 수탁받아 수행하면서 대안교육과 혁신교육운동에 열심을 내었던 분들을 많이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과연 ‘미래학교’가 그간의 혁신운동을 포장지만 바꿔 싸 놓은 정치적 ‘브랜딩’인지, 아니면 대안교육운동과 혁신학교운동이 뚫어 내지 못한 어떤 지점을 돌파해 내겠다는 새로운 ‘권위’의 도전인지 파악해 보고 싶었다. 혁신^{革新}은 ‘가죽을 벗겨 무두질함으로써 그 성질을 완전히 바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의미다. 혁신 이론가들은 따라서 혁신^{Innovation}과 개선^{Improvement}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면담을 하면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90년대의 대안교육운동과 2000년대의 혁신학교운동에는 ‘학교 붕괴’로 대표되는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교의 정상성 회복’과 ‘근대 학교 체제를 넘는 새로운 교육의 생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적인 욕구가 불분명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 중 ‘학교 붕괴로부터 정상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결과가 만들어졌다. 대안교육이나 혁신학교를 통해 보다 즐겁고 행복하며 수업이 의미 있는 학교생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대안교육운동 20여년, 혁신교육운동 10여년을 거치면서 ‘근대 학교 체제를 넘는 새로운 교육의 생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들이 존재했다. 기존의 학교 패러다임 속에서 만들어 내는 노력들은 주로 ‘개선’의 영역에 있으면서 새로운 혁신의 필요성은 수면 아래로 숨기는 효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 지점들이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조차 여전히 근대적 학교태를 유지하면서 교사 주도의 ‘다른’ 교육과정들을 운영하는 것 역시 되짚어야 할 지점이다. 근대 학교의 역사는 길게 잡아야 150년 정도이며 이는 분명히 근대적 산물이다. ‘대량 생산’

4) 하태욱 외(2020), <미래형 대안학교 (가칭)해리포터학교 설립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하태욱 외(2020),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하태욱 외(2020), <대덕구형 미래학교(가칭) 및 혁신놀이터 설립 운영 방안 연구>, 대전 대덕구.

이라는 경제적 체제와 ‘능력주의’라는 사회적 체제를 집약시킨 교육적 기관으로서 학교는 근대 사회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 ‘학교다님^{Schooling}’으로써 얻게 되는 유형·무형·의도적·비의도적 산물들은 이 체제에 대한 수용과 순응을 양산해 왔다.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과정에 대해 비판하면서 등장한 대안학교들조차 학교 다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기^{De-Schooling}보다는 다른 학교 다님^{Another-Schooling}의 차원에 머물러 왔다는 비판 지점은 그래서 뼈아프다.

따라서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새로운 교육에 대한 상을 세우는 것이다. 단순히 기존의 교육에 대한 보완책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와 개인이 요구하는 배움과 성장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을 세우는 목표에 공적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개인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측면에 다양성을 확보하되, 선택권 확대 논리가 단순히 시장원리에 매몰되어 다시 획일화되는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불가피하게 만들어 내는 사회적 격차의 문제를 교육에 떠넘기지 않지만 민주적으로 교육과 함께 풀어 갈 길을 찾아 나갈 등대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이 철학과 지향이 실현될 수 있는 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틀을 적당히 보완하거나 약간의 수정과 첨가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에 머무를 수는 없다. 앞서 설정한 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배움의 권위’를 새롭게 고민하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어야 한다. 그 철학적 기반과 내용성을 만드는 것은 분명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논의가 단순히 공허한 논쟁에 머물거나 형식적 틀의 선을 만드는 일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교육의 권위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공위에 대해 언급했던 지그문트 바우만의 인터뷰 한 대목을 인용해 본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안은 어딘가에서 여러분이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 기회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니까요. (……)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⁵⁾

3. 새로운 교육을 향한 시대적 요청과 전망

If we teach today as we taught yesterday, we rob our children of tomorrow.

오늘도 어제처럼 가르친다는 것은 내일의 아이들을 빼앗는 일이다

- 존 듀이(John Dewey)

현재의 사회가 과거의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에 대한 결정으로 과거의 교육대상자가 받아들

5) “[문명, 그 길을 묻다 - 세계 지성과의 대화](6) 지그문트 바우만 영국 리즈대 명예교수”, <경향신문>, 2014년 3월 24일.

교육이 검증되는, 과거의 교육대상자들의 미래이자 과거의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의 결과였다면, 교육의 미래는 교육대상자가 받아온 과거와 현재의 교육이 어떠하였는지 검증되는 장이자 현재의 교육대상자가 살아갈 삶의 현장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다. 그래서 교육의 미래는 과거-현재-미래의 수평선에서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시간이 흘러가면 도래할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현재↔미래의 유기적인 인과망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과 결정의 결과로 전망되어지는 총체적인 사회상인 것이다. 미래교육에 관한 연구는 여러 미래학자들이 전망하는 다양한 미래모습을 고려하여 단순히 미래를 받아들이는 순응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미래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미래에 대처하려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이다. 미래교육은 미래세대가 살아갈 공동체의 보다 나은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세상과 삶의 방식에 적절히 대비하도록 돕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권순영, 2018).

교육부 관료인 최승복(2020)은 『포노사피엔스 학교의 탄생: 스마트폰 종족을 위한 새로운 학교가 온다』를 통해 ‘근대 산업사회에서 설계된 근대학교는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멀티미디어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현대사회에 더 이상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서 이제는 ‘단종(斷種)의 대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근대학교의 종말이라는 단어와 새로운 포노 사피엔스를 위한 학교의 탄생을 주장한다.

미래사회는 미래기술의 발달로 연결성이 빨라지고 편리해지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미 가상공간에서의 학교는 이미 등장하였고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사이버대학, 미네르바 스쿨(Minerval School)과 같이 캠퍼스가 없는 온라인 대학, 유다시티(Udacity), 코스라(Coursera), 에덱스(Edx), 무크(MOOCs)와 같은 무료 공개강좌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 이상 과거의 지식생산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나 지식유통업자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학교가 교육적 가치를 이어가고자 한다면 교육활동의 범위를 학교의 안과 밖, 가상공간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하며 오히려 가상공간에서 불가능한 ‘면 대 면’ 교육방법을 새롭게 구성, 강화하여 미래를 살아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방식과 태도, 가치관이 삶에 스미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 하겠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세계적 확산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물리적 학교가 문을 닫는 현상이 드러나면서 ‘학교’없는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화되었다. 개학연기와 휴교,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이어진 소위 ‘강제로 소원된 미래’로 불린 이 시대를 통해 우리는 학교가 그 동안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에 대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배움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학교를 통해 성장시켜야 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동안 미뤄왔던, 그러나 이제는 회피할 수 없는 질문들을 통해 새로운 상이 필요함을 우리는 몸으로 깨달을 수 밖에 없었다. 애플에서 일하며 교육을 변화시키는 업무

를 담당했던 존 카우치와 하버드 교육혁신사업을 맡았던 제이슨 타운은 공동저자인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2020)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는 다르게 배운다’면서 ‘콘텐츠 소비자에서 창작자’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교육의 새로운 시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학력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2021년 발표한 바⁶⁾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 이전부터 상위권은 증가하고 중위권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왔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비율이 더 커지는 반면 중하위권의 비율은 개선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여기에는 학생의 가정배경이 가장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컸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위권 학생들의 비율은 국영수 과목 모두에서 증가하고 특히 수학에서는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됨을 볼 때 학업성취의 불평등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와 공교육 부재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YTN이 공동조사한 ‘2020년 코로나 학력격차 실태’에 따르면 중학교에서는 중위권이 줄고 상하위권이 느는 학력 양극화가, 고등학교에서는 상중위권이 모두 줄고 하위권이 느는 학력 저하가 나타남으로써 교육격차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역시 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은 이 문제를 전적으로 사교육에 기대어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쏠리고 있음으로써 양극화를 더욱 심각하고 고착화하고 있다. 2021년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23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0년에 비해 약 21%(4조1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사교육의 내용도 진학준비나 보육 보다 학교 수업 보충이나 선행학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전통적인 의미의 기초 학력 문제가 이렇진대 21세기 VUCA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미래사회 역량의 차원에서는 어떠할지는 더욱 크게 우려가 된다.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하지만 ‘역량’의 문제는 우리 공교육이 매우 일부분, 특히 미디어나 디지털 리터러시 분야에 한정하여 선언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학교 현장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회경제적 계층을 불문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부모의 문화적 배경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혁신이 나오지 않으면 단순 우려와 비판만으로 넘어서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먼저, 학교 개념의 재설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지식 전달의 역할, 경쟁을 통한 서열화, 줄 세우기를 위한 공간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학습망 구축과 공존을 위해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실험실(=상식의 틀을 벗어나 뭔가 시

6) 서울교육정책연구소(2021),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2021-1 현안분석 보고서. 서울교육정책연구소.

7) 권남기(2022). 코로나로 학교 문 닫자 학원에 몰렸다. 사교육비 ‘역대 최대’. YTN뉴스 2022.03.11.

도해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곳)로서의 공간,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을 연결하고 배움을 제공하는 열린 플랫폼(엄윤미, 한성은, 2020)이 되어야 한다.

알타이(Attali)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활동을 학교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말한다(Attali, 2001)

학교에서는 팀을 이루어서 공부하는 법이나 교내나 교외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기쁨을 얻는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어떤 학교에서는 이미 행해지고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학교 근처에 있는 양로원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보라는 과제를 아이들에게 제시하면, 아이들은 연주회를 열거나 벽의 페인트칠을 다시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기들 나름대로 스스로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건 더 이상 경쟁이 아니며, 자아실현을 위한 하나의 도전이 된다. 학교는 젊은이들을 서열화하거나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된다.

미래교육에 대한 공통적인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 문제해결, 협업, 커뮤니케이션, 창의성 관련 역량을 키우는 것, 배우는 법을 배우기, 공감능력,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 등이다. 배움은 항상 학생중심으로, 프로젝트 기반의 세상과 맞닿은 배움이 유연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담장을 넘나들며 배움이 일어나야 하며 전문가와 적재적소에서 협업하며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리프킨은 인간이 주변 이웃, 가상공간, 지구 생태계와 불가분의 공동체 관계 속에 있음을 배우고, 인과관계가 아닌 상호 연관된 현상의 그물로 세계를 인식하여 전체적인 지식을 교육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Rifkin, 2009) 미래사회에 등장하는 직업을 가질 기회를 얻도록 새로운 전문기술도 배워야 하지만, 지식과 에너지를 생산, 공유하는 주체로서는 것, 사유재산에 기반한 삶에서 벗어나 가상공간, 공공광장, 지구생태계까지 공유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이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ifkin, 2014).

그러므로 배움이 일어나는 환경이 중요하다. 학교 안에 갇힌 프로젝트 수업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면서 차이를 인식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도 호기심을 품게 되는 환경이 중요시 된다. 천편일률적인 학교라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미래적 상상력의 발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업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학교 안팎에서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환경을 통해 학교 안에서의 배움 뿐 아니라 학교 밖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위셔&모즈카우스키, 2014).

Jamie Steckart 싱크 글로벌스쿨 대표는 싱크 글로벌스쿨에 합류하기 전까지 20여 년간 학생들과 함께 학교 밖 환경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실행해왔다. 그는 일반학교에서는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사회 문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학생들은 교실에 있어야 한다. 오전 10시만 되면 학교부근 장터에 노인들이 나와 한참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 장면을 목격할 기회조차 없다. 같은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가 아니라 노인들이 많은 곳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자연스럽게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미 도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자 하는 것들은 일어나고 있다. 몰입은 환경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 스스로 배우는 경험과 배움을 위한 최적의 세팅을 제공하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는 학생이 낯선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교육에서는 교과와 진로 사이의 경계가 없다. 최고의 배움은 교류를 통해서 일어나고 개인의 관심사와 연결되며 실제 사회와 관련이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 교육의 방향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하는 지식 전달과 암기로부터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수업 중에 정보를 전달해 주기보다는 정보를 얻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어떤 방향의 진로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이기에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 확신을 갖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배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업은 개인이 배움에 능동적인 태도를 갖추고 주체적인 지적 탐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어야 한다. 즉, 배움에 접근하는 방법과 태도를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미래교육에 있어서는 교사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지식 전달자가 아닌 코치, 촉진자, 안내자, 활성자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교사는 이제까지 배움의 대상이나 수단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수많은 교육적 자원을 찾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교가 속한 지역을 배움이 일어나는 환경으로 설정하고 지역사회기관이나 기업의 전문인력들이 배움에 함께 참여하도록 연결하는 역할이다.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교과지식, 역량, 진로상상력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성장의 과정을 함께 하는 사람, 학생이 배움을 주도하는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교사이다. 교사는 프로젝트 과정 중 학생에게 되짚어야 하는 질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학생과 함께 고민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학생이 배움을 주도하는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교사이다. 학생이 어느 시점에 누구와 어떻게 협업하는가에 따라 얻는 경험과 배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연결자의 역할을 한다. 전문가와 협업을 전제로 하는 배움에서 교사는 배움의 과정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전문가와협업하는 모든 과정에서 학생이 얻게 되는 지식이나 역량을 살피고 생의 경험을 배움의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 일정을 조율하고 학생이 필요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 학생을 끊임없이 격려, 응원하는 지지자의 역할을 한다(엄윤미, 2020).

미래교육에서는 학교를 이끄는 리더와 교육가, 행정가의 목적과 시선이 모두 학생을 향해 있어야 한다. 학교의 자치적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특성화학교나 각종학교의 기준에 묶여 있기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평준화된 기준이 아닌 개개인에 맞추어 스스로 만들어가는 커리큘럼과 수업 선택권이 주어져 개인적 관심으로부터 시작되고 확장되는 배움의 경험이 일어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배움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세상의 자원과 연결하고 학생들의 배움에 조력하는 전문인으로서의 교사, 교사들의 협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 구조와 리더십, 배움의 자원이자 연결과 창작의 도구로서의 기술이 필수적으로 작용한다.

미래교육의 학교는 선발과 평가의 기능보다 사회화와 학문탐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학교 밖의 '지역사회'와 가상공간을 통해 만나는 '전세계'와 배움을 공유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미래사회에서 '배움'은 학령기에 학교 안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학령기 이후에 활용하는 순차적 흐름이 아니라 학령기 구분을 넘나드는 과정이며 나아가 학교 안과 밖, 직업과 일상, 가상과 현실도 넘나드는 자율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지식들의 변화를 수용하여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지식의 심지가 될 수 있는 기초지식, 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식견과 안목,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아이디어, 서로 다른 지식을 연결 짓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배움'은 인간의 관계와 경험을 넓히고 타인 및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지식공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교육의 지식은 삶과 유리되지 않고 경험을 통해 타자와 공유될 때 인간 성장에 기여한다. 미래교육은 경험과 삶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래학교는 삶을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생활의 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권순영, 2018).

또한 미래교육은 삶의 주체로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Werber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건강한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숨을 잘 쉬고, 잘 자고 자신이 지구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아이들은 교육내용, 교사나 친구와 주제에 대해 대화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대화하며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어간다. 교재를 만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생각을 넓히고, 결국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처럼 배움은 '세계 만들기'와 '친구만들기'의 삼위일체를 추구하는 대화적 실천이다(손우정, 2016). 자아와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의사소통의 문화를 내면화하기 위해서 긴 호흡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함은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의 핵심 요소로 세계시민성과 환경운리를 내면화하는 과정 또한 중요할 것이다.

OECD는 이미 1997년부터 시작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교육에 있어 핵심 역량의 정의 및 선택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Education 2030을 통해 새로운 미래교육의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학습나침반’으로 불리는 역량중심 교육의 체제는 학생의 자기주체성(Student Agency)를 중심으로 동료학습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공동체 간의 협력적 행위주체성(Co-Agency)를 기반으로 좋은 삶(Well-being)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지식과 가치, 기술과 태도를 통해 핵심기초를 다지고 변혁적 역량과 새로운 가치창출, 갈등과 딜레마의 조정, 그리고 책임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성찰과 예측, 행동의 순환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UNESCO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21세기 직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 어려움들을 교육으로서 지속가능한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왔다. 2015년 제70차 UN총회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의결한 바 있다.



종합해보면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속에서 태어난 교육제도로써 근대학교 프로젝트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으며 후기 근대를 넘어 탈근대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새로운 교육의 시대적 필요성을 말하는 핵심 관점이다. 이를 위해서 지식의 축적과 선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교육체제를 학습자들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자기주도성을 통해 자신과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가는 삶의 질 향상과 공존의 틀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다. 미래역량 조차도 공존의 측면 보다는 경쟁력의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교육을 논의하기는 참으로 난망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틀과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교육을 향한 틀쌍기에 나서야 하는 시점일지도 모른다. 혁신의 기반이 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ruption)이 교육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짚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국 교육의 현실과 극복 방안¹⁾

한 만 중

(전 서울 교육청 정책기획관/한국교육정책연구원 이사)

여는 글

○ 교육은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 사회화를 통해 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추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실이 맺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들여다 보는 돋보기가 될 수 있다. 건강한 사회는 희망의 교육의 터전이 될 수 있지만 병든 사회는 아픈 교육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현재의 모습이 제 분야에서 건강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문 역시 자유롭지 않다.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해 회의적인 상황이지만, 이 화두를 틀어지고 가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현재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교육정책을 넘어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그 시대의 과제와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집단 지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성과는 미비하였다.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조차 주요 공약으로 부각되지 못하였고, 기존 정부에 대한 심판 투표를 통한 권력 교체로 귀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기간에 교육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고 의지도 약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집권 이후에도 김인철 장관 지명자의 낙마에 이어 음주 운전과 논문 표절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박순애 장관이 만5세 입학 문제로 낙마하면서 교육정책의 책임자가 부재한 채 정책의 기본 추진체계가 무너져버린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1)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원고는 2009년에 국회연구보고서로 작성한 한국 교육 문제의 본질 규명과 진보적 교육개혁 방안 탐구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 시점의 과제를 결합하였다.

고스란히 안고 있는 방식으로 반도체 인력 충원이라는 산업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 수급 정책이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불과 한 달 만에 산업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정리하지 못한 정책이 수도권 입학 정원 확대로 벧꽃 지는 순서대로 문을 닫아야 하는 지방대학의 운명을 부추긴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표되었다. 이 와중에 김병욱 국민의 힘 교육위원회 말대로 대선 공약도 인수위 의제도 아니었던 만 5세 입학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보수 진보 진영 할 것 없이 전 국민적인 반대에 직면하고 유일하게 분열된 국론을 통일시켰다는 의도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면서 허망하게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담론과 해결 방안이 분출되었다. 교육부문에서도 기본적인 교육기관이었던 학교에 학생들이 가지 못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과 방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 환경을 갖추는 문제, 에듀테크가 필수적인 교육 여건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따른 교수 학습, 생활 교육의 변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태전환 교육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코로나 19는 학습결손과 학습중간층 붕괴 등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 심화 문제 등이 기존의 과도한 입시경쟁 교육과 학벌주의체제,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되고 있는 교육비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3년 차를 맞이하고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되면서 문제의식은 관성화되고, 정책은 대응 방안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 어디에서 다시 교육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희망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고통의 영역이 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력에겐 선거 시기에 표도 되지 않으면서, 집권 이후에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관리 대상(?)이었던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 코로나 19 등이 교육 난제들을 사회적 의제화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지 못하였다. 집권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고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의 폐기, 보수 교육감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학업성취도 전집 평가 등의 평가체제 강화가 입시 경쟁 교육 강화로 귀결되면서 교육 모순을 심화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형국이다.

○ 공교육 혁신과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학생 중심의 교육을 기조로 한 진보 교육감들이 2010년 교육자치 선거에서 6명이 당선되었다. 2018년 선거에서는 14명이 당선되면서 지방교육자치 영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주류로 등장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2년 6월 2일 교육자치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 선거라는 구도와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그간의 학습효과에 의한 단일화 등을 통해 약진하였다는 것이 중론이

다. 혁신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학교혁신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 복지의 확대, 9시 등교와 학생인권조례 등의 학생 중심 교육을 주요 정책은 입시 경쟁 교육을 완화시키고, 교육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모두에게 질 높은 공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진영의 후보들은 혁신학교가 학력저하의 주범으로 공격을 당하고, 초등학교 수준에서나마 입시 경쟁 교육의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정기 고사 폐지 정책 등에 대한 보수 후보들의 공세에 대해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경기, 부산, 강원, 충북, 제주 등에 당선된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인수위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에는 전집평가의 도입과 평가 과목의 확대 등을 앞다투어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 정책이 본격화되면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회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된 지역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정책들을 고심하고 있고, 혁신학교, 학생인권 조례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성찰적 평가와 대안 마련을 위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 “경쟁없이 배우는 세상을 향해” 이번 토론회의 모토는 현재의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에서 결코 놓치지 않은 의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입시경쟁교육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고, 김동춘 교수가 [시험능력주의] 에서 한국형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처럼 그 폐해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 다시 희망의 영역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남한산 초등학교 등의 학교 살리기 운동에서 시작된 혁신학교 운동이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었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는 보편적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학벌체제를 극복하려는 차원을 넘어 전 사회적 영역에서 노동시장 문제와 임금구조 개혁을 위한 활동 등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교육문제의 본질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진보적 교육개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진단과 해결 방안, 과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1. 한국 교육 문제의 본질과 진단

1. 한국 교육체제의 구조와 문제점

한국의 중 고등학교 취학률은 98% 이상이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709% 가량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취학률과 고등 교육 진학률은 높은 교육열과 학력과 학벌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학벌 사회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은 고등교육 단계까지 보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가 확대되었

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반면에 개인이 과도한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실한 공교육체제에서 교육비 부담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게 만들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사교육비를 전적으로 개인이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강고한 학벌 체제는 전 국민이 높은 교육비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안정되고 쓸만한 일자리”를 얻기 위한 보증수표가 되고 있는 “학벌”을 얻기 위한 무한 경쟁 구조에서 안간힘을 쓰게 만들고 있다. 학벌체제의 사다리를 타기 위한 입시 교육이 중심이 되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창의성 계발과 인성 교육은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폐단이 벌어지고 있다. 과도한 교육비 부담과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이 상호간에 맞물려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희망”이 되지 못하고 “고통”을 주는 분야가 되고 있다. 교육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영역이 되면서 사회 재생산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2. 공교육 측면에서의 한국 교육의 특수성

(1) 기형적인 공교육 체제

-급속한 교육기회 확대와 높은 사립학교 비율-

한국의 공교육체제는 대학 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넘어설 정도로 급속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교육 기관의 확대 과정은 개인과 민간의 역할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은 기형적인 공교육체제가 구축되게 된다. 급격한 교육 수요의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은 초등 교육에 집중 투자하였고 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 등 민간에게 위탁하여 교육 기회 확대 요구에 대한 대응을 해 온 과정이었다.²⁾ KDI(1997)와 이종재(2006)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발전단계는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의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이 변화하여 왔다고 분석된다(이종재, 2006: 138-150).

제1단계는 1945년에서 1960년까지의 기간으로 해방직후의 인프라 부족과 한국전쟁이후의 파괴라는 악조건으로부터 교육을 재건한 시기이며 이 때 초등교육의 완전취학(1957년 초등학교 90% 취학 도달)이 이루어졌다. 제2단계는 1961년에서 1979년까지의 기간으로 수

2) 일제 말기의 취학률은 54%였는데, 그때 이미 교실이 부족해 2부제를 실시하던 상황이었는데, 1949년 취학률이 81%에 달했으니, 교육 수요의 폭발과 그에 따른 시설 부족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1946년 교육 예산 11억원 중 68%인 7억3천만원이 초등교육의 경비로 쓰였으며, 초등교육에서도 국가예산으로는 학교 운영비의 30%만 충당됐고 나머지 70%는 학부모들이 부담했다. 중등교육 비용은 교원 봉급을 제외하면 80%를 학부모들의 협조에 의해 조달했다. 당시 미군정이나 초기의 이승만 정권은 국가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교육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란 미명하에 정당화했다.(한홍구 한겨레 21 2006)

출지향적 고도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 중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교육을 확충한 시기로, 1969년과 1974년에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무시험입학제도를 도입(평준화정책 실시)함으로써 중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평등화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3단계는 1980년에서 1997년까지의 기간으로 고등교육이 확대되고 교육의 질적 개선 및 교육 개혁 패러다임의 변화 등이 요청된 시기이다. 대학정원확대정책 등을 통해 대학교육의 양적 확대가 두드러졌고 교육 민주화 및 자율화 등을 기조로 한 개혁 요구가 가시화되었다. 제4단계는 1998년에서 현재까지의 시기로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특징으로 하며, 지식기반사회의 인적자원개발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때는 초중등교육의 완전취학과 고등교육의 확대에 따른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교육의 양적 확대보다는 적합성 제고가 요구되었고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 과정에서 교육의 변화에 대해 한홍구 교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과 산업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훈련된 노동력의 공급의 필요와 높은 교육열에 의한 교육기관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등 교육 기간이 급속하게 확대된다. 1970년에 16.08 개교이던 중학교가 1995년에는 1000 여개교가 늘어 2,683개교에 이르게 된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할 수 없었던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중학교 교육의 30% 수준을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가 담당하게 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1953년에 368개 교에 불과하던 학교 수가 2215개로 늘어나게 되어 1990년 88.0 %, 2001년에는 95.3%의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컸다. 이는 교육예산을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남는 부분을 중학교육에 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때문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사립 고등학교의 비중은 1952년 20.3%, 1954년 32.9%, 1956년 36.1%로 계속 증가했다. 공교육에서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고, 국공립학교의 비중이 적다는 것은 해방 뒤 국가가 공교육기관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학의 지나친 비대는 사학 우선 정책의 산물이 아니었다. 이는 국가 교육재정의 궁핍으로 초래된 국공립 교육의 부실에서 온 부산물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1950년대에 사립학교는 특히 중등교육 부분에서 국가의 책임을 대신해 교육 기회 확충에 큰 기여를 했다(한홍구 2006).

1970년에 54,550명에 불과하던 대학 정원은 2000년에는 무려 712,775명에 이르게 된다. 1994년 도입된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의해 대학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불과 5년 사이에 대학이 46개가 세워지고 대학 정원이 15만 가량 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고등교육 기관의 팽창은 고등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기 무색할 정도로 많은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된다.

(표. 고등교육의 팽창 (단위 : 개교, 명))

구분	대학		교육대학		산업·기술·방송대		전문대학		계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70	71	37,190	16	6,000	-	-	65	11,360	153	54,550
'80	85	116,700	11	4,680	1	18,000	128	84,455	225	223,835
'90	107	196,550	11	3,220	7	58,220	117	130,520	242	388,510
'95	131	253,180	11	4,980	18	92,120	145	215,470	305	565,750
'00	161	314,410	11	4,735	21	99,455	158	294,175	351	712,775
'02	163	324,309	11	4,855	21	100,945	159	293,174	354	723,283
'03	169	327,040	11	5,015	21	101,693	158	285,922	359	719,670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에 학생 충원률이 절반 수준인 학교들이 나타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실 사립대학의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부실한 대학의 경우에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비율이 고등학교보다 높고 급여는 중 고등학교 교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게 지급되고 있다. 급속하게 대학 설립이 늘어났지만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기반은 너무도 빈약하여 교수 1인당 학생수(OECD, 2007)는 31.2명으로 최하위 수준이고 전체대학에 대한 투자 기준 역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GDP 대비 0.4% 수준으로 OECD 회원국들이 평균 1.2%인 것에 비하여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대학 진학률은 청년 실업률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력과 업종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사회에서 직업 교육에 대한 기피와 학력을 얻기 위한 대학 진학을 선호하면서 전문계 고교는 해마다 줄어들고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67% 가량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진학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강화되면서 대학 진학률이 90% 수준에 이르게 되어 고등 교육이 대중 교육 수준으로 확대되었지만 대학 졸업장은 3 D 업종에 취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³⁾

교육 기관의 확대는 교육의 기회 균등과 교육 평등 지수를 높여주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교육 받은 질 높은 노동력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반면에 급속하게 학교를 늘리게 되면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민간에게 담당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3) 과도한 높은 진학률에 대한 해법으로 대학 진학률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왕에 고등 교육의 기회가 확대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유럽 사회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지니고 있는 업종 간의 임금 격차를 과감하게 줄이고 전문계 학생들이 취업 후에 필요에 의해 다닐 수 있는 개방 대학체제를 확대 시키는 등의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영 유아 교육 단계에서 유치원 취원률은 40%에 불과하고 이중에 국공립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54 %에 불과하다. 중 고등학교 중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학교 22% 고등학교 46% 에 이르고 대학의 경우에는 90% 수준에 이르고 있다.⁴⁾ 의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유- 초 중등 단계에서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경제력과 선호도에 의해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이 다르게 이루어지면서 교육기회의 차이는 유아 교육 단계부터 학력차가 구조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있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영어 유치원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치원 단계부터 대학까지 이러한 기형적인 교육체제에 의해 운영되면서 국민들의 의식에는 교육은 개인의 사적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왜곡된 교육관이 형성되게 된다.

(2) 과소투자과 부실한 공교육

- 열악한 교육 여건과 개인에게 전가되는 교육비 부담-

교육재정 정책 역시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개인에게 전가되어 왔다. 1945년의 해방은 정치적 해방만이 아니라, 교육받고 싶은 열망의 해방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는 극히 미약했다. 일제는 1930년대 후반 이후 ‘동화정책’을 실시하고 징병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국민학교’를 세웠는데, 미군정이나 그 뒤를 이은 한국 정부는 당시의 폭발적인 교육 수요에 대해 재정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1945~60년 기간 중·고등학생 수는 10배 이상, 대학생 수는 13배 증가했는데, 이 같은 급성장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국가가 이 같은 폭발적인 교육열 앞에서 교육재정을 확보할 의지도 능력도 없을 때, 학교들이 문을 닫지 않은 것은 ‘사친회’로 결집된 학부모의 힘 덕분이었다. 미국의 PTA(Parent-Teacher Association)와는 달리, 1950년대 한국의 사친회는 교원들의 생활대책 강구, 교사 건축, 학교 운영비 조달 등을 위해 발족한 것으로, 학교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다. 사친회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에 지불한 금액이 학교 수입의 93%였다. (한홍구 2006)

이러한 교육재정 구조에서 국가는 교육기회의 양적확대에 따라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공급 받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민간에게 전가시켜 왔다. 이러한 재정 동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곧 학력에 의한 사회 경제적 지위의 재분배구조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후대에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우골탑을 쌓아가면서 교육을 위한 재정동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교육재정

4) 한국 교육에 있어서 사학은 일제 치하에서 민족 교육의 산실로서의 역할과 해방 후에도 국가가 필요한 학교를 부족한 교육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해 준 역할은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일제는 통감부령을 통해 사립학교를 핍박하여 사립학교의 비율이 줄어들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공교육의 기본 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사립학교의 비율을 적정하게 줄여 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정책은 소위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납입금에 의한 재정동원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1989년 민주화를 위한 교육백서)

(교육재정 규모 적정 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 연구 2000)는 교육재정이 얼마나 과소 투자되어 왔는가를 입증한 연구이다. 교육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자본투자액만도(1999년 현재가치로) 약 9조 3500 억원에 달하고 OECD 국가의 평균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과거 과소투자된 부분 중 자본 투자 부족분이 약 36조 7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의 교육재정 규모는 1990년대 초까지 GDP 3% 수준에 미달하는 최소 비용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전교조 등 교육운동진영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김영삼 정부에 와서야 GDP 5%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가 정책 차원에서 검토되고, 2004년에서야 비로소 이에 근접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으로 OECD 수준의 3.4배 이상의 교육비 부담을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OECD가 30개 회원국 등 49개 국가의 교육여건(2001~2003년)을 분석해 발표한 '2004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학교 교육비의 민간(사학 및 학부모) 부담 비율은 한국은 41%로 OECD 평균의 3.4배나 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8.2%로 OECD 평균(5.6%)은 물론 미국(7.3%) .일본(4.6%) 등에 비해 컸다. 하지만 민간 부담 비율이 3.4%에 달해 미국(2.3%), 일본(1.2%), 프랑스(0.4%)보다 훨씬 컸다.

(표. 교육비 부담구조에 대한 국제비교)

(단위 : %) <OECD, 2005>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정부부담	민간부담	정부부담	민간부담
미국	93.0	7.0	34.0	66.0
일본	91.5	8.5	43.1	56.9
스웨덴	99.9	0.1	87.7	12.3
프랑스	93.0	7.0	85.6	14.4
OECD 평균	92.4	7.6	78.2	21.8
한국	76.2	23.8	15.9	84.1

이러한 교육비 부담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은 곧바로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비 중에 교육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

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수 진작을 가로 막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비를 개인에게 부담시키면서 경제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일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사회 진단과 권고] 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7. 위원회는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해 가족들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과중한 재정부담이 지워지는 점을 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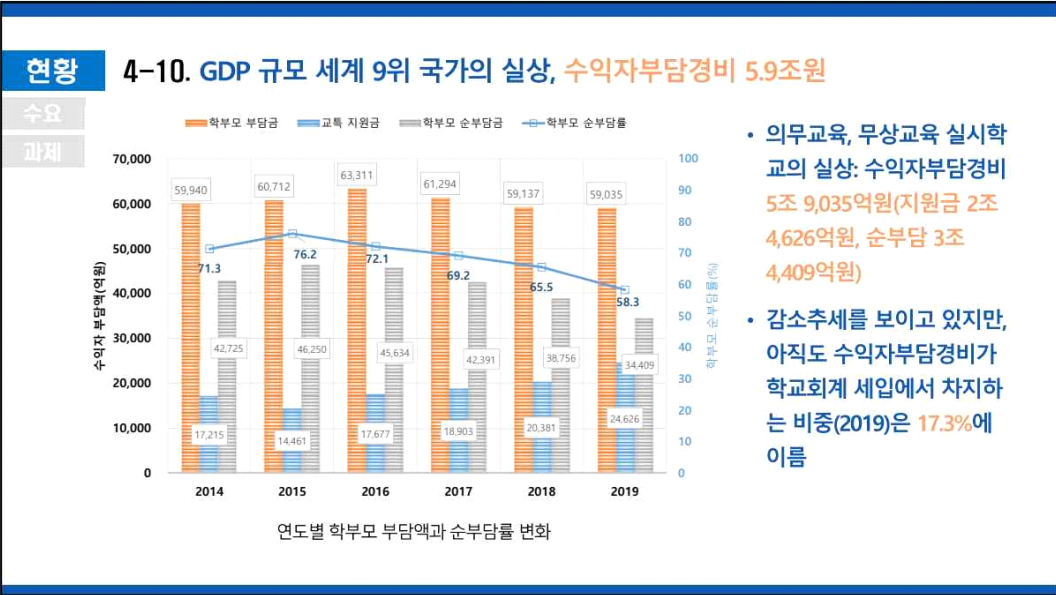
28. 위원회는 또한 고등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며,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

. 제안 및 권고

42. 위원회는 ...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도록 공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담아야 한다. 중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화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의 합리적 기한 설정(timetable);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이 부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교육과 관련해 공교육시스템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사회 각계 각층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 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한국정부의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공교육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는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무상 교육⁵⁾이 2002년 대선에서 진보 정당의 공약으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으로 본격화 되면서 선별적 복지를 넘어서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일반 원리로 자리잡게 된다. ⁶⁾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도교육감들과 교육시민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실시되게 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무상급식이 도입되고, 무상교육이 논의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무상교육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등에 의해 2013년에 와서 OECD 수준으로 초·중·등 부문에서 GDP를 기준으로 볼 때,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정부투자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민간투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고등교육에서 뚜렷하였다. ‘16년에 비해 ’17년에 OECD 국가의 평균 정부투자의 비중은 조금 늘어난 반면(‘16년 4.04% → ’17년 4.09%), 민간투자 비중은 감소하였다(‘16년 0.86% → ’17년 0.79%).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투자의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5) 공교육은 일반적으로 무상교육, 의무교육, 보통 교육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6)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오히려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아침 급식 등 무상교육의 범위를 넓히는 공약을 제기한 바 있다.



현황 4-11. 후진적 교육비 부담 구조

수요 • 수익자부담경비별 부담내역

과제

부담항목	2018			2019		
	부담금	지원금	순부담	부담금	지원금	순부담
급식비	33,213	17,013	16,201	33,953	20,655	13,297
방과후학교활동	11,885	1,722	10,162	11,414	1,625	9,790
현장체험학습비	5,638	579	5,059	5,359	757	4,602
청소년단체활동	464	1	463	337	1	336
졸업앨범대금	733	10	724	735	12	723
교과서대금	1,094	171	923	795	237	558
기숙사비	1,367	114	1,254	1,344	111	1,233
누리과정비	735	629	106	782	682	100
교복구입비	1,289	41	1,248	1,283	398	886
운동부운영비	967	4	963	1,073	5	1,069
돌봄활동운영비	0	0	0	366	65	301
기타	1,752	98	1,653	1,594	79	1,515
계	59,137	20,381	38,756	59,035	24,626	34,409

- 기본적 교육활동에 속하는 현장체험 학습비 4,602억원 학부모 부담
- 교육활동을 위한 기본조건인 교과서 구입 대금 558억원 학부모 부담
- 교육복지의 기본인 방과후 학교활동비 9,790억원 학부모 부담
- 후진적 교육비 부담구조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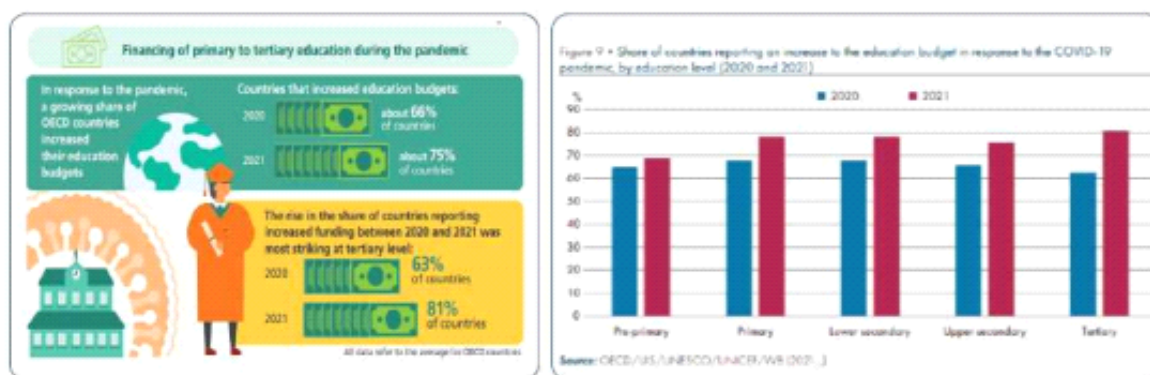
(송기창 2021 지방교육재정포럼 자료집)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초·중등 교육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고등교육으로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공식화하였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교육부 국정과제로 발표하였고 보수 언론과 경제지 등을 통한 대대적인 여론 형성과 기재부 출신을 차관보로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 보여지듯이 한국은 여전히 교육비 부담구조에서 학부모에게 의존하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육과 방역이 함께 가능한 교육 여건 개선, 교육 양극화 해결 등을 위한 예산은 태부족인 상황이다. 그린 스

마트 사업의 적용 대상이 30년 이상이 지난 학교의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번 집중 호우로 서울 지역 학교 중에 68개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수요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으로 향후 세수가 60조 가까이 줄어든다고 정부 스스로 예측하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고등교육재정을 동생에게 필요한 예산을 갖다 메꾸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 초중등 분야의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에 반하여 학습 결손과 학습 중간층 회복, 교육 양극화 해결 등에 써야할 예산을 줄이자는 것에 다른 아니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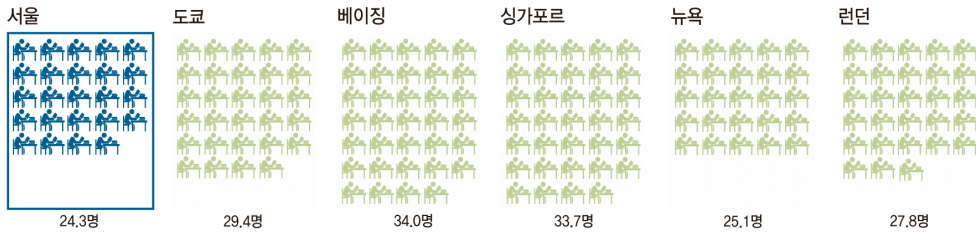
✓ OECD(2021. 9.). *The State of Global Education : 18 Months into the Pande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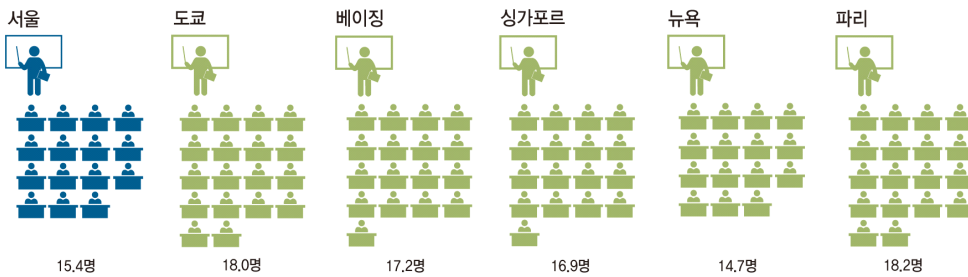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정하고 여기에 맞는 교육재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부제 수업과 한 학급에 70명이 넘는 과대 과밀학급 문제는 2000년대 초까지 한국 교육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었다. 2020년 현재 서울시가 뉴욕 동경 등의 다른 대도시와 비교한 학급당 학생 수의 규모는 다음 표에서 보여지듯이 서울시 오히려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학급당 학생 35명 정책과 0.84% 수준으로 세계 최저의 낮은 출산율이 서울의 경우에는 0.6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 것의 결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19가 창궐하면서 등교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역은 결국 서울과 경기 등인구 밀집 지역에서 나타났고, 세종, 울산, 강원, 서울 교육청 등이 초등학교 1학년부턴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한국 사회가 기형적인 공교육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여건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설정해야 할 과제이다.

✓ 2040년까지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번호	세부목표 10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초등 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4-5	교육에서의 성별평등을 하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계층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남수경,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정책총 및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

(3) 지속적인 사교육의 팽창과 이중의 교육비 부담

- 두 개의 다른 원리의 교육; 공교육과 사교육-

한국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원리를 가진 교육기관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와 학원으로 대표되는 사교육 기관과 다양한 방식의 사교육이 일상적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형적인 공교육체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부담시키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다.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여기에 필요한 교육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학비와 학습 준비물과 체험 학습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풍토가 지속되어 오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상 교육의 원리는 과격한 이념적 논리로 치부되어 왔다.⁷⁾ 교육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회권 차원의 권리로서의 교육이라는 가치가 터부시되고, 교육을 통한 입신영달(立身榮達)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소까지 팔아서 자식들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로 치부되어 왔다. 우골탑(牛骨塔)이라는 단어에 이러한 교육 현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이다.

입시경쟁 교육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 되어버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교육체제와 맞물려 사교육⁸⁾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의 과외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던 시기에 표면적으로 사교육이 줄어든 시기를 제외하고는 사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1970년대에 비하여 2008년에 학원수와 수강자수는 무려 50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한국 사회의 최대 중의 하나가 되었다..

2021년 사교육비 통계에서도 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9조 4000억원보다 21.0%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았고 사교육 참여율도 7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도 36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사교육의 팽창에 따른 문제점은 “사교육없는 세상”이라는 교육단체가 만들어질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이중적 부담을 지게 하여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되면서 소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 국가 간의 비교에서 한국은 가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배 정도

7)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 급식을 추진하자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무상 급식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는 식으로 색깔 공세를 폈다. 김문수 지사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면서 차상위 계층 이하의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급식 예산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시혜적 차원의 복지를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로서의 무상 교육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8) 사교육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사결정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개인의 의사에 의해 사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동북아시아 지역이고 영 미 등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강화된 나라의 경우에도 사교육은 특정 시기에 일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이들 나라의 교육 시장화 정책은 공교육 기관인 학교를 의사 시장으로 만들고 공교육에 시장주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에 이르고 있다. 노후에 대한 대비는 고사하고 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해 부채가 늘어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와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산업과 사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5년 서비스총조사'는 사교육분야에 사업체수 8만 8,568개, 종사자수 35만 5,298명, 매출액 10조 5,765억 원, 영업이익이 3조 5,031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 산업 내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 수에서 73.4%, 종사자 29.9%, 매출액 18.8%, 영업이익 56.1%를 점하고 있다. 2008년도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38만 7,487명 중에서 5만 4,094명이 교육산업으로 진출하였다. (김일영 2009)

(표. 연도별 사설 학원 수 및 수강자수)

(단위: 개, 명)

구분	학원수	수강자수		이수자수		강사수		직원수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70	1,421	119,681	52,992	460,590	172,985	5,541	1,388	2,255	777
1975	2,977	248,517	87,267	1,976,030	470,816	7,740	1,652	3,751	1,464
1980	5,023	411,162	183,748	444,974	690,279	13,332	3,583	7,599	4,039
1985	11,196	657,039	292,967	2,079,806	922,172	22,559	9,266	8,502	5,237
1990	28,862	1,793,583	856,457	5,865,085	2,676,331	55,409	32,781	22,563	14,182
1995	52,058	3,230,275	1,606,536	9,037,971	4,354,060	96,591	63,668	35,100	21,115
2000	57,935	3,412,430	1,733,043	7,772,909	3,877,223	135,637	86,633	47,415	27,213
2001	58,951	3,620,147	1,830,105	8,309,777	4,150,067	146,547	93,162	53,101	30,614
2002	60,206	4,220,437	2,153,481	7,635,489	3,798,229	167,153	105,466	53,675	30,778
2003	63,724	4,411,753	2,245,112	7,410,299	3,689,859	171,001	110,302	55,844	32,567
2004	62,764	4,801,016	2,448,318	9,241,098	4,607,913	184,107	120,203	55,935	32,326
2005	64,591	4,479,681	2,276,002	9,281,245	4,715,993	177,795	113,283	53,858	30,502
2006	66,841	4,714,812	2,399,798	9,088,728	4,587,790	182,096	119,999	56,098	32,182
2007	67,649	4,585,670	2,320,746	9,009,979	4,502,007	180,913	117,613	54,541	32,624
2008	70,213	4,689,053	2,378,284	8,274,051	4,147,375	187,020	121,701	57,528	33,080

또한 사교육 산업의 지속적인 팽창은 국민 경제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사회적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사교육 기관의 이득은 현실적으로 입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공된 입시용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수 방법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학원식 수업은 학생들의 창의력 형성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을 갖추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시대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구조화된 한국 사회에 필요한 창

의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협력적 관계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선발경쟁에서 유리한 능력만을 길러주는 교육은 사회적 생산성을 지니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사교육의 팽창이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학원화되는 것이다. 학원의 과잉 팽창과 사교육비의 증가는 교육의 목적인 “전인 교육”을 폐기시키고 “입시 경쟁력”으로 대체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출산률이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수십 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고 있지만 대학졸업 때까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교육비가 3억 원을 넘는 교육비 부담은 주요한 요인이다. 역대 정권마다 사교육 대책을 내놓고, 사교육비 증가 통계를 축적을 세우고 있지만 사교육의 과잉 팽창이 이루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접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교육을 시장화 하는 시장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해왔지만 시장 그 자체인 사교육이 과잉 팽창되면서 공교육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동북아 지역의 국가에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가장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한국 사회는 교육체제와 주요한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는 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임기응변식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정권마다 속출하였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팽창시키는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공교육은 불완전하나마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진다는 ‘형식’에 있어서는 공교육인 것에는 틀림없으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내용’의 측면에서는 공교육이라 하기 어렵다. 이를 굳이 그대로 지칭하고자 한다면 이름 하여 ‘자본주의적 공교육’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내용적 측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절대 다수가 사립학교라는 사실이다. 공교육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태생하고 출발하였다면, 국가(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가 교육 기관(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이용해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장에서 상술했던 것처럼 한국은 제대로 된 공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이미 사립학교들이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교육 기관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국가와 자본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에게 학교 설립까지 위탁하였다. 이 과정에서 토지개혁에서의 특례법 등이 만들어지면서 사립학교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졌다. 이를 국가가 이용해 공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즉 ‘사립학교를 통한 공교육’이라는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교육체제와 비교해 볼 때 기형적인 형태의 교육체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또 하나 한국 공교육의 문제는, 교육 내용의 문제다. 이는 비단 공교육이라고 제한할 것도 없이 한국교육 일반의 문제인데, 다름 아닌 입시교육

이 교육 일반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교육을 하되, 내용은 입시교육인 것, 이것은 곧 한국 사회의 평등성의 부족으로 연결되는 문제다. 평등성 부족은 학벌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존치시키고 그것을 위한 대학-중등교육 서열체계와 그것의 핵심 기제인 입시체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입시교육체제로서의 공교육 역시 정상적인 공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입시교육내용 그 자체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입시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 체제에 편입할 구성원을 양산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공교육은 급속하게 교육기관이 확대되어 초 중등 분야뿐만 아니라 고등 교육에서도 높은 취학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즉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교육체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의무 교육 단계가 여전히 중학교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사부담 공교육비 부담 등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에서 사부담 공교육체제라 칭할 정도로 공교육의 기반이 취약하다. 이러한 공교육의 취약성은 필연적으로 사교육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학교 제도가 도입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공교육기관인 학교 제도가 확대되었지만 사교육(개인의 선택과 부담 능력에 의해 차별화되는 교육)이 병존하면서 과도한 교육비 부담과 이중의 학습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학벌과 학력이 중시되면서 출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학업에 대한 자발성과 흥미도는 최저 유 초 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민간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공교육 체제와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 투자, 학벌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에서 비롯되는 과도한 사교육비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게 하는 트라이앵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이들에게 질높은 공교육을 실현한다”는 기본 원리가 실현되어 교육기회의 평등을 넘어서서, 결과의 평등을 담보하는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의 교육 문제와 가장 고질적인 과제인 사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II.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진보적 교육개혁 방안

앞에서 한국 교육의 근본적 문제에 대하여 교육 기회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교육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민간과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사회적 이동의 수단으로 교육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학벌 학력 체제가 공고화되고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이 토양이 되어 사교육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경복은 한국 교육의 주요 모순을 세 가지로 규정한 바 있다. 첫째는 한국 교육의 (신)식민성을 지속시키는 국제적 모순이다. 일제의 식민지교육 체제에 미군정의 과도적 교육정책이 ‘신식민적으로’ 가미되어 성립된 한국의 교육 체제는 60여년의 시간 속에서 뚜렷한 자기 정

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여전히 국제적 종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학제와 교육내용 그리고 행정 체계 등이 자기 정합적 토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의 비전도 한국 교육 자체의 문제의식이나 고유한 변혁 논리보다 대외 종속적 문제의식과 미국식 모사에 급급한 현실이 그 점을 잘 반영한다. 유학 문제, 외국어 교육 문제, 교육개방 논란, 서양가치 중심 교육 내용과 평가 방식 등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그런 모순의 파생물들이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모방하는 단계까지는 이런 문제가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고유한 교육 체제를 필요로 하는 단계에서 국제 종속의 모순은 매우 첨예한 한계로 작용하며 교육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된다.

둘째는 공교육을 사회적 신분의 재생산 수단으로 고착시키는 계급적 모순이다. 교육을 교육 자체의 가치보다 신분 재생산의 가치에 더 치중하여 인식하고 운용함으로써 공교육이 사회적으로 지식 권력의 평등화를 매개하여 보편적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기보다 양극화를 통한 불평등의 심화와 신분 고착의 기제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교육의 제도와 현장은 교육 자체의 실현 공간이 아니라 사회 제 계급의 이해가 교차하고 헤게모니가 충돌하는 각축장으로 기능한다. 입시 과열, 대학서열화, 학벌 문제, 평준화 갈등, 사교육 문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등의 문제들이 그런 모순의 파생물들이다.

셋째는 교육을 정치와 경제의 목적에 과도히 종속시키는 부문적 모순이다. 정치적 민주화 이전에는 교육을 직접적인 정치 수단으로 악용하였고, 형식적 민주화 이후의 교육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의 '비교육적' 간섭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성장 신화를 낳으며 진행된 산업화 과정과 그 이후로 경제 이데올로기가 모든 사회 영역의 가치를 억압하는 가운데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날이 갈수록 교육의 목적은 경제적 보조물로 규정되어 가는 경향을 낳는다. 교육이 사회적 토대 위에 존재하므로 경제와 무관할 수는 없지만 교육이 상대적 자율성마저 포기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은 중대한 모순이다. 교육의 정치적 동원과 통제, 교육의 상품화, 시장 논리의 교육정책 등이 그런 모순의 일환이다. (주경복 2008)

교육은 인간화와 사회화의 과정이자 양자를 통합해 나가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화의 측면이 강조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적 목표에 적합한 역할이 더욱 비중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개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자기실현이 이루어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할 때 교육은 가장 이상적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이상적 역할 모델은 현실 사회에서 구현되기가 쉽지 않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어려운 사회 구조에서 개인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교육은 타인과의 투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입신영달을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학벌체제가 여전히 굳건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고, 학력 간의 임금격차가 대졸과 고졸 사이에 100: 80 수준인 사회에서 이른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은 사활적인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여건에서 교육의 주요한 기능은 진학을 위한 서열짓기와 성적에 의한 선발에 초점을 두게 된다.

결국 개인적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의 기능이 극대화되면서 이를 위한 공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급기야는 이에 대한 부담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사회 재생산 자체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교육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육은 우리 사회의 고통이자 재앙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위한 “모든 이를 위한 질높은 교육” 이 공교육 체제에서 담보하고 이의 실현이 사회적 역량으로 발현할 수 있는 원리는 어떻게 갖출 수 있는 것인가?

1. 무상 공교육과 학벌, 학력주의 타파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를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 재생산과 발전 전략 차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과 공보육 시스템을 전면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프랑스의 경우에 저출산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문제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공보육과 교육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무상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만 16세까지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교육도 국가가 부담하는 나라가 된다면 적어도 교육비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꺼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초등교육은 의무이고 무상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1984년 8월 2일에 개정된 “교육법”에는 3년의 전기중등교육이 의무인 것을 규정해놓고 있지만, 그것이 “무상”이라고 명시되고 있지 않다. 무상 교육의 수준이 단순히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 교재 및 교구의 무상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교과서 무상지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영 유아 단계의 보육, 교육 기능이 요구되면서 초등학교 이전 단계에 다양한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교육의 기본 원리인 출발점 평등의 원리조차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9)

9) 이번 만5세 취학 문제를 추진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강변한 바 있는데 실제 출발점 평등을 위한 현재의 영 유아 단계의 교육 보육 현실의 실상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주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이러한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취약한 공교육의 토대에서 유치원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의 단계가 확대되는 것은 교육기회가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교육 불평등 구조가 각 단계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게 된다. 준칙주의 도입 이후에 급격하게 확장된 대학생 시기에는 전적으로 개개인의 부담하고 서민층의 자녀들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시간으로 학업에 전념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라 할 것이다.

무상교육의 내용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뿐만 아니라 공교육 전반과 고등교육까지 학생들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서 확대시켜야 한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빈곤 아동이 보건복지부 통계로 180만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받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빈곤층을 고려한 공적 배려를 하는 교육복지 정책의 확대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 사회복지의 확대 속에 포함하여 실현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교육복지 제도는 취학 장려비, 생계보조비, 양육비, 아동수당 등까지로 확대해야 한다.¹⁰⁾ 한국의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는 수업료를 면제하는 수준에서 대단히 취약한 실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8년 대선 공약으로 무상 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과 각 단계별 비용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여 제출한 바 있다.

- 2012년까지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 25조 6천억원 추가 확충
 - 교육강국을 꿈꾼다면 OECD 상위 수준을 목표로.
 - 2012년 기준으로 25조 6천억원 추가 확충
 - 2008년부터 무상교육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2년에 12조 6천억원 소요
- 유아(3~5세아) 무상교육: 2조 3,365억원 소요(2012년 기준)
 - 2012년 기준으로 유아 1인당 월 37만원(반일제), 월 10만 2천원(전일제 추가분) 지원
- 초중고 무상교육: 4조 5,761억원 소요(2012년 기준)
 - 현행 무상교육(초등학교 3개 부분, 중학교 2개 부분)의 범위를 확대
 - 무상교육 지원 내역: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학습준비물비 등 6개 부분 지원
 - 초등학교: 3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46만 8천원 지원
 - 중학교: 4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83만 7천원 지원
 - 고등학교: 6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233만원 지원
-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 상한제: 5조 7,112억원 소요(2012년 기준)
 - 사립대 등록금 상한제
 - 2012년 기준 사립 일반대생은 474만 5천원 절감(등록금 최대 375만원).

10) 현재 북유럽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는 생계보조비 및 아동수당의 지급과 같은 사회보장제의 도입에 의해서 의무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생 하위 10% 등록금 무상

□ 무상교육의 가계부 절감액: 2012년 기준 4,828만 1천원(유아~사립 일반대생)

○입시폐지로 인한 입시 사교육비 절감까지 반영하면, 1억 1,476만 5천원.

○국립 일반대생의 경우 무상교육의 효과 4,991만원, 입시사교육비까지 합하면 1억 1,639만원.

둘째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학력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학벌과 학력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나왔는가에 따라 삶이 결정되고 있고, 대학 서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입시가 유 초 중등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입시 중심 교육은 공교육을 왜곡 황폐화시키고 사교육비를 무한 증가시키는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남대 학교교육연구소가 조사한 '대구·경북지역 대졸자 취업 현황과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9개 4년제 대학의 취업과 전공 일치도는 60~70%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문·사회계열의 전공 일치도는 평균 44.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200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회, 왜곡된 대학서열체제의 근본적 개편, 학교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입학전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자본에서 인간으로 ”

시장주의 교육 개혁의 본질과 문제점은 이명박 정부에 와서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자율형 사립고가 등록금이 일반계 고교의 3배에 달하는 학교이고 학교 선택권 역시 결국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을 봉쇄하는 일종의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이 일부 특권층 수요자를 위한 교육임이 명백해졌다. 시장주의 논리의 배경에는 “한국 교육이 무한 경쟁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는 자신들의 신념이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자율과 경쟁을 위한 규제의 완화가 교육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 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학교 평가와 기관 평가, 교원평가, 성과급 제도 도입,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로 실시하고 교육정보 공개법에 의해 성적 결과를 공개하는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들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외교 안보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정책도 이명박 정부의 본뜨기를 하고 있다. 반도체 인력 증원과 만5세 취학 등의 정책에서 교육정책이 산업 정책의 하위 범주임을 강변하고 있는 것도 판박이의 모습이다. 이러한 정책이 교육 문제를 해결

하기는커녕 악화시킨 사례를 우리는 빠져리게 경험한 바 있다. 교육시장화 정책은 역설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는 정책이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한다면 서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여 대학 설립을 남발한 결과와 그 폐해가 빗꽃 지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사라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 시장 역시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들인 비용과 노력에 걸맞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대기업과 고용 규모가 큰 선호도가 높은 직장의 수는 이 기간 동안 오히려 반비례하여 줄어 들었다.

(표. 규모별 종업원수(1993~2006))

(단위: 명, %)

	1993	1996	1999	2003	2006	증감율
계	12,245,073 (100.0)	14,006,754 (100.0)	12,920,289 (100.0)	14,729,166 (100.0)	15,435,766 (100.0)	10.2
1-9명	4,566,614 (37.3)	5,663,780 (40.4)	5,875,403 (45.5)	6,672,408 (45.3)	6,678,855 (43.3)	17.9
10-49명	2,583,901 (21.1)	3,047,491 (21.8)	2,830,977 (21.9)	3,534,048 (24.0)	3,791,040 (24.6)	24.4
50-299명	2,325,830 (19.0)	2,597,158 (18.5)	2,348,473 (18.2)	2,726,696 (18.5)	3,049,269 (19.8)	17.4
300-999명	1,107,454 (9.0)	1,245,154 (8.9)	1,002,138 (7.8)	1,020,884 (6.9)	1,043,554 (6.8)	-16.2
1000명이상	1,661,274 (9.5)	1,453,171 (10.4)	863,298 (6.7)	775,130 (5.3)	873,048 (5.7)	-39.9

OECD 국가군을 대상으로 한 주요 노동지표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좋은 일자리’ 상황과 관련된 각종 순위는 양극단을 치닫고 있다. 즉, 18개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거의 모든 지표가 최상위권 아니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상위권을 차지한 지표들은 임시직 비율(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1위), 성별임금격차(1위), 연간노동시간(1위),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수(1위) 등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최하위권을 차지한 지표들은 고위직/관리직 여성노동자비율(24위로 최하위), 공적 사회복지 지출(24위로 최하위), 비준한 국제노동협약 개수(28/30위), 노동조합 조직률(29/30위), 임단협 적용률(29/30위) 등이다. 이러한 고용 시장의 질 저하는 일부 선호도가 높은 직장을 가기 위한 무한 경쟁을 더욱 강화시켜 놓았다. 공무원과 교원 임용 고시가 수십 배의 경쟁률을 자랑하게 된 것은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 주는 단적인 예이다.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으로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과연 진정한 교육 생산성을 높이는 것인가? 한국의 학생들은 PISA와 TIMSS 같은 국제 학업 성취도 비교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얻어진 이 성적을 얻기 위해 주당 50시간의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핀란드

의 경우에는 주당 35시간을 투여할 뿐이다. 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비교 연구에서 한국의 아이들이 성적에 있어서는 우수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시대를 운운하면서 학업 성취도 평가와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오히려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호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바탕이 되었다고 평가받은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에서 “이제까지는 학생과 학부모가 경쟁하는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학교와 교사가 경쟁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사와 학교는 무엇으로 경쟁하는가? 바로 수학능력고사 성적과 대학 진학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경쟁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 전인적 교육과정의 실현,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교육 공동체 실현 등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성적의 결과에 의해 학교와 교사가 평가되는 평가 국가체제가 구축되면, 실험과 독서, 토론은 사라지고 주입식 수업과 반복되는 문제풀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을 가져오는 정책이 과연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할 것이다.

진보적 교육단체들의 중심으로 발표되었던 2009 교육선언은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자본에서 인간으로 를 기치로 내세운 바 있다.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식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식은 더 이상 반복 훈련을 통해 지녀야 할 암기 능력이 아니며, 협소하게 주어진 정답 찾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기능을 갖추는 일도 아니다. 세계는 점점 창의력과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요구한다. 진정한 경쟁력은 이러한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어른들의 의무이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은 평화와 공존, 협동과 창의성을 익히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듯, 우리 학생들 모두는 소중한 인격체이다. 각자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급우들을 존중하고 협동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삶을 체득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무엇인가? 교육이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고,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고,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다. 교육의 생산성은 바로 이러한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실현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미래에 필요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정립하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로 교육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3. 학력과 업종 간 과도한 임금 격차 해소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학벌 체제를 지탱하게 하는 바탕에는 학력과 업종에 따른 임금 차이가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화 되면서 이루어진 노동 유연화로 56%의 비정규직이 만들어진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벌 체제의 사다리에 오르기 위한 경쟁의 배후에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벌 문제를 넘어 고용 구조의 개편에 다가서야 한다. 최근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북유럽 모델이 영미 모델처럼 굴이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등과 협력, 자율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스웨덴이 우리 사회와 다른 것은 어떤 사람이 적절한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책임에 떠넘겨진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국가는 모든 개인이 그러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고 학습 능력이 뒷받침되는 한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웨덴의 교육 제도는 평등이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바로 일자리에 대한 이런 관점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차별 없는 교육만이 모든 개개인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복지 모델은, 개개인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1세~5세 아동기의 탁아와 보육, 6세~16세까지의 무상 의무교육, 16~19세의 무상 고등학교 교육, 유급 대학 및 대학원 교육, 직업 선택 및 취업 지원, 실업수당의 제공, 유급 산전후 휴가, 출산부터 8세가 될 때까지(또는 1학년을 마칠 때까지) 한 자녀당 480일의 부분 유급 휴가, 2달의 부모(아빠) 휴가, 부분 유급 병가, 19세까지의 무료 치과 진료, 의료비 상한제, 연금 등 총체적인 복지 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복지 시스템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웨덴에는 직종이나 학력 등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우리나라처럼 매우 크지 않다.¹¹⁾ 이와 같이, 대

11) 2006년에 대학교수 34,300SEK(여자 28,300), 의사 54,400(여 44,400), 기초학교 교사 23,300(여 23,200), 고등학교 교사 25,200(247,000), 법률 전문가 47300(여 39,400), 택시운전사 20,500(여 18,600) 등이다.

- 스웨덴 정신노동자 임금 비교 http://www.scb.se/templates/tableOrChart____28202.asp

- 스웨덴 육체노동자 임금 비교 http://www.scb.se/templates/tableOrChart____28208.asp

학에 가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대학교육이 무상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두가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다가도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대학에 입학하여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무모한 입시경쟁에 몰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안승문 2009)

북유럽 모델이 시사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의 구축과 함께 학력 차별 금지법과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축소 등의 사회 정책을 동반하여 추진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한국의 근대 공교육체제는 서구식 학교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일제시대, 해방 후와 한국 전쟁 산업화 시대를 거쳐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서구의 공교육체제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상교육, 의무교육을 기본으로 후기 중등교육과정인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교육을 기본으로 북유럽의 국가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비하여 한국의 공교육체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학교 설립마저도 국가 대신에 민간이 담당하여 사립학교의 비율이 영 미 등에 비교해서도 네배 이상이 되는 기형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다. 허약한 공교육의 기반과 사립학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체제에서 학벌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사교육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허약한 공교육 체제와 과도한 사립학교 비율, 공교육과 사교육의 과잉 팽창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벌주의 체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5.31 교육개혁으로 본격화된 교육시장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면서 교육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켜 왔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전개하겠다는 레토릭의 본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을 계층화시키고 자율과 경쟁을 내세우면서 입시 경쟁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초기의 교육부문에서의 난맥상에서 이명박 정부의 데자뷰가 보이고 있는 것처럼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유지, 학업 성취도 등 국가 평가체제 강화 시도 등이 본격화되면 우리 교육이 예정된 실패의 경험을 반복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부문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사회 체제 전체가 바뀌어야 할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교육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사회 체제의 개혁과 결합한 본질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허약한 공교육 체제와 과도한 사립학교와 교육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팽창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교육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무상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은 국가와 자본이 담당하게 해야 한다. 과도한 비율의 사립학교 중에 한계 사학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립학교로 전환하고, 부실한 사립대학을 국 공립대학과 연계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경쟁 교육을 폐기하고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발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교육 문제는 교육 자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학벌체제를 지탱시키고 있는 학력과 업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동춘은 제도개혁과제로 시험능력보다는 실적주의 강화, 평가의 다양화와 패자부활 제도화, 대학서열 구조 완화, 대학 공공성 확대, 수도권 분산, 입시 고시 외의 다른 지위 획득이나 지위 이동의 통로 확보, 구조개혁 과제로 정치계급 전문직, 관료집단의 지위 독점, 지위 폐쇄 극복, 위로부터의 이동 유인 축소, 노동 존중, 노동권 확대를 통한 상승 압박 완화, 임금 불평등 극복, 사회적 연대, 가치 개혁 과제로 가치 기준의 단일성 극복, 성공지상주의 물질주의 가치관의 극복, 능력주의의 이데올로기 성 비판과 극복 등을 제기하였다. 교육문제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전 영역에서의 대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방안이다.

서구의 공교육체제 형성 과정에서 국가와 노동이 담당했던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민주화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 교육 운동 진영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는 과정과 맞물려 무상 교육 확대 등의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일정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만5세 파동에서 학부모 단체 등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 단체와 진보 교육감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이 막무가내식 정책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이 사회 전반에서 우리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시점에서 교육의 본연의 역할을 바로잡는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을 향하여 진정한 교육개혁의 좌표를 재정립하는데에 이 토론회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 강영혜 외 (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수탁연구 CR 2005-27
- 교육개혁위원회(1995. 5. 31).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1)(제2차 대통령 보고서).
- 교육개혁위원회(1998. 1). 교육개혁백서.
- 교육부(1999).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2). OECD 주요국가 교육통계(통계자료 SM 2002- 4).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2004 평생교육백서.
- 교육혁신위원회(2006)(편). 역대정부 대통령위원회 교육개혁보고서(III). 교육혁신위원회.
- 교육부(2022) 사교육비 통계 보도자료
- 김경근 외(2006). 한국 교육문제의 진단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 김동춘(2022) 시험능력주의: 한국의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김용일(2001). 위험한 실험: 교육개혁의 정치학(2쇄). 서울: 문음사.
- 김용일(2002). 교육의 미래: 시장화에서 민주화로. 서울: 문음사.
- 김용일(2005. 3. 8).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열망과 실망의 악순환을 넘어.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2년 평가와 3년 전망 심포지엄: 민주적 발전모델과 선진한국의 진로(자료집). 213-222.
- 김일영 (2009) 한국 교육산업 대 해부<3> 한국 사교육 산업의 현주소
- 김현준 (200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본질과 문제점. 참교육연구 3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3. 2).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국정과제 T/F 보고서).
- 박남기(1994). 한국인의 교육열 이해를 위한 대안적 관점. 교육학연구. 32(5), 185-206.
- 박도순 외 (2008) 한국 교육개혁의 평가와 대안 탐색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연구과제
- 반상진(2005). 한국 교육개혁의 공과 분석.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창립기념학술대회.
- 성태제 외(2007). 최신 교육학 개론
- 송기창 외 (2021) 2021 지방교육재정포럼 자료집
- 이윤미(2009) 공교육의 원리.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 강좌 자료집
- 정갑영 외(2000) 교육재정 규모 적정 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0-10)

최장집(200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6쇄). 서울: 후마니타스.

최장집(2005). 사회적 시민권 없는 한국 민주주의.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서울: 후마니타스), 444-487.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1997).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1997.* 한국교육개발원(1998). OECD 교육지표(해외정보자료 IEI98-1).

한국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적 공동체교육에 대하여

김 지 원
(NCKK 교육위원)

I. 들어가는 말

최근 방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런 대사가 있었다.
“어린이는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당장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당장 행복해야 한다.”

드라마에서는 이를 “어린이 해방 선언문”이라고 칭했다. 대사를 곱씹어보니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것들이었다. 물론 가상으로 그려낸 드라마이지만, 이 당연한 바들을 굳이 선언해내야 하는 현실이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임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자본만능주의,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인간화와 사회화라는 중요한 목적을 지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방식의 변화는 개인주의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는 현대 한국사회와 교회의 개인주의, 한국 청소년의 공동체적 가치 인식과 그 현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특히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는 발제자의 입장에서 기독교의 공동체적 전통과 의미를 현재 한국사회의 공동체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연결시켜보고자 한다.

II. 한국 현대사회와 공동체적 가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3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아직까지도 마스크에 가려 서로의 얼굴을 다 마주보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과 애정을 표현하는 포옹과 악수 같은 인사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서로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던 일들은 네모난 화면 속에 타자로 입력한 글자들을 주고받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불필요한 소통 과정이 줄어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고 평가하거나 사람을 마주하는 피로를 줄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불필요한 과정들을 정리할 수 있음은 분명 좋은 결과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협력, 연대와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논하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공동체적 가치는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추구해 나가야 하는 가치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계급과 자본에 쫓겨 생존을 위한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적 가치들을 알면서도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공동체적 가치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 유명한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대단하게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전하는 교회는 진부하고 지루한 곳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한국의 몇몇 교회들도 이러한 가치들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가치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공동체적 가치를 전하는 기독교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며 교회는 계속해서 이를 전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III. 한국 청소년의 공동체 인식과 기독교교육 현실

1. 한국 청소년의 공동체적 가치 인식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또래들과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은 자신이 경험한 시간들의 축적된 확신이며 과거의 내적 동일성과 연속성으로 인해 역할 혼란의 위기를 경험하며 형성된다. 청소년은 아동기와 성인기의 사이에서 자신의 균형과 변화,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대해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¹⁾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통찰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소속된 공동체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의 경험과 배움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1) Erik. H. Erikson, 윤진 역, 『아동기와 사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322.

한국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한다. 생활시간의 상당 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자체가 경쟁과 학업 성취에 대한 압력을 포함하고 있기에 긴장과 불안을 가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가 학벌과 학력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높은 교육열과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친구이면서 동시에 내가 이기고 넘어야 할 경쟁상대가 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한국의 청소년들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도록 암묵적으로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국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학원, 과외 등으로 하루의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생활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형성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공동체 생활을 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 학벌중심주의 때문에 경쟁 구조가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공교육의 공동체교육은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순형과 이영미는 서구근대 사상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 개인주의적 가치가 유입되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개인주의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모습으로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²⁾

공교육에서는 윤리, 도덕 교과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들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학벌주의와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공동체적 가치들을 그저 시험문제를 맞추기 위해 외워야 하는 암기 대상이나 수행평가의 주제로만 마주하고 있다. 가치의 중요성이 전달하는 상황과 배경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교회 청소년과 공동체교육 현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청소년들은 부모의 신앙에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또래 친구들과 교회를 통해 만나고 성장하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자라난 교회 안에서의 또래집단은 왜곡된 집단주의적 모습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새로운 친구들을 받아들이고 친해지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나 청소년이 새 교회에 정착하여 신뢰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경우로 나타나곤 한다.

2) 이순형, 이영미, 「청소년의 가치지향과 생활만족의 관계」(서울대학교 청소년학연구 제4권 제1호, 1997), 20.

또한 부모의 요구에 의해 교회에 오게 되는 청소년의 경우,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친구관계보다 개인의 목표달성을 더 중요시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추구하는 문화가 무의미하고 가치 없게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교회에 오더라도 예배만 드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반별모임 등 공동체교육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한국교회에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다룬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는 죄의 문제에 집중하여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죄인이기에 구원받아야 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강조하여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의 구원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배타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 형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러한 신앙 유형을 지닌 기성세대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청소년들은 큰 실망감을 갖게 되어 교회공동체 자체를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기도 한다.

한국교회는 복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물질적 기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으며, 때로는 사회적 약자를 멋대로 규정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가부장제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갇혀 있거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경우가 그러하다. 존 웨스터호프(John. H. Westerhoff III)는 참다운 공동체는 각 세대의 역할을 모두 통합한다고 말했다. 교회가 인종과 성별, 사회적, 경제적 지위, 국적, 민족적 기원에 의해 분리되거나 성별에 의해 특정한 역할이 고정화되거나 평등한 지위가 거부되는 기독교 공동체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³⁾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와 사회에서의 모습이 이분화되거나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올바른 공동체적 가치관을 경험하기 어렵고, 기성세대의 신앙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한다.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공동체적 가치관 형성 교육은 절실히 요구된다.

IV. 기독교적 공동체의 목적과 비전

1.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교회의 목적

기독교 사상에 따르면 유일신인 하나님이 인간을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도록 창조했다. 그렇기에 인간은 고립된 단독자 혹은 타인과의 교제를 단절한 채로는 존재할 수 없다. 웨스

3) John H. Westerhoff III, 정웅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2008), 103.

터호프에 따르면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상호적으로 관계하여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또한 공동체적 존재로서 창조된 인간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 만일 누군가가 억압되고 상처입고, 평등과 정의가 부정되고, 소외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기에 인간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사귀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죄는 공동체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을 의미하며,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태만도 속한다고 설명한다.⁴⁾

또한 기독교적 공동체교육을 위해서는 교회의 사명과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웨스터호프는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며 오히려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회의 사명과 목적은 기독교 신앙이 역사 속에서 경험되고 이해되어 믿음에 의해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는 일이다.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⁵⁾ 이러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따르면 교회는 공동체 그 자체이며, 그 역할 감당을 위해서는 교회 교육도 타인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웨스터호프는 기독교 교육은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여 행해지도록 계속해서 투쟁해야 하며, 공동체가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독교교육은 근본적인 책임으로서 세상 속에서 공동체적 생활을 지향해야 하며, 그 동기를 부여해 나가야만 한다.⁶⁾

2.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적 비전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특별한 방식을 거치게 된다. 이 방식에 동의하고 응답하는 것은 예수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요구들을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⁷⁾ 기독교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에 의해 전파되고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e)은 교회는 예수가 삶으로 보여주었듯이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 존재하게 하고 또 인류를 한가족으로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상황과 자리에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삶 속에서 정의와 평화적 가치들을 사회, 경제, 정치, 문

4) 앞의 책, 75-76.

5) 앞의 책, 85.

6) 앞의 책, 139.

7) Thomas H. Groome, 이기문 역, 『기독교적 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3), 85.

8) John H. Westerhoff III, 앞의 책, 92.

화적 제도들 속에 녹여내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그룹은 주장한다.⁹⁾

V. 한국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공동체교육 제언

1.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한 기독교 공동체 원형 기억

교회(ecclesia)라는 말은 모임 또는 성회(assembly)라는 뜻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교회를 드러내고, 실현하는 목적의 모임을 갖는다는 뜻이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타종교인들에게 무신론자라고 비난받았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일반적, 전통적 의미에서 ‘종교’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만연했던 엄숙한 제사들에 익숙한 사람들과 달리, 성스러운 장소나 예배에 관심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¹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죽음 이후 생긴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기억하여 함께 생활하고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였다. 원래의 교회는 개인적인 구원과 기도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동체 모델을 청소년들에게 전한다면, 공동체의 존재 목적과 가치에 대해 긍정적 방향의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과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2. 이웃사랑과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

공교육에서는 공동체 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봉사활동 의무제를 실시한다.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은 필수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하는 구조적 특성과 성적과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사실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동의 의미를 제대로 느끼면서 봉사하기는 어렵다. 시간에 쫓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봉사시간을 채우는 것이 더 급급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공동체교육에서 이웃과 사회를 향한 가치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마련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는 청소년들이 거시적이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다 자신의 지역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불의한 상황들을 지속시키는 사회체제와 구조들을 직접 마주하고 변화시켜가야 한

9) Thomas H. Groome, 앞의 책, 93.

10) Alexander Schumemann, 김아운, 주종훈 역,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 (서울: 복있는사람, 2008), 28.

다는 것이다.¹¹⁾ 이어서 해리스는 청소년들이 실제 사회에서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를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과 정치조직, 권력을 집행하고 입법화, 공유하는 정치적 형태의 공동체를 추구하도록 계속해서 교육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¹²⁾

예시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하기 쉬운 사회적 활동들을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일부의 사회활동들은 비교적 쉽고 단순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매년 열리는 지역의 행사나 관심 있는 정치적 분야의 모임이나 캠페인, SNS를 통한 다양한 참여방법들을 소개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마을과 지역을 위해 함께 모여 진행할 수 있는 봉사들을 직접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에 몸이 불편한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을 주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돕거나, 평소에 놓치고 있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또한 공공건물이나 교통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나 대안들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방안을 직접 실천하도록 도울 수 있다. 청소년기에 이러한 사회적 행동들과 실천들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은, 성장 후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구조를 바꾸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자라나도록 만드는 일이다.

VI. 나가는 말

교육포럼의 주제인 “교육은 □□이다”의 빈 칸에 들어갈 말들을 고민했다. 필수, 인권, 생존과 같은 말들을 떠올렸지만 결국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잠시 뒤 이 문제는 애초에 정답을 내는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정답을 도출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은 주입식과 암기식 교육을 경험한 발제자의 익숙함과 관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교육포럼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에 비하면 발제자는 한참 어리고 경험도 적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한 문제들은 1번에서 5번까지 중에 하나의 답만 고르면 되는 문제들은 아니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닐 때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기도 했다. 실패의 경험도 도움이 되었으며, 스스로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도 알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교회학교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공교육과 달리 기독교교육은 필수적이지 않기에, 참여도와 관심도 모두

11) Maria Harris, 고용수 역, 『교육목회 커리큘럼』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186.

12) 앞의 책, 184.

급격하게 줄었다. 특히 부모에 의존해 교회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참석할 수 있는 선택권마저 없었다. 그럼에도 기독교 전통 속에서 공동체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한 것은 두 가지 이유였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시선에 대한 죄책감과 사과의 표현이었고, 둘째는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해나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의 편안한 길을 찾기보다, 멀지만 확실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 사회와 교육이 되길 희망한다. 이와 함께 기독교 교육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실천하여 정의롭고 평등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지런하고 세심하게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쟁이 아닌 협력 교육, 입시 폐지가 답이다

이 윤 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얼마 전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보도됐다. 상위권 학생 두 명이 교사들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서 시험 문제를 알아낸 방법이었다. 이 사건은 같은 반 학생이 쓰레기통에 찢겨 버려진 답안지 쪽지를 하나 하나 붙여서 증거로 제출해 밝혀질 수 있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는 ‘내 등급이 떨어지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전학생을 받지 말라’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붙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는 종종 상위권 학생 간의 보복성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다. 가해 학생 조치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상급 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만 당하지 않겠다’는 보복이 추가된 것이다.

이런 사례들을 학생 개인의 일탈 행위, 민주시민 교육의 부재로만 볼 수 있을까?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못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대평가 체제가 만든 결과다.

우리 교육은 국가 주도의 정형화된 시험이 가장 공정한 방식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쳐 왔다. 그러한 경쟁교육 체제에서 상위 1%를 차지했던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교실에서 성적이 우수한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여기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쟁 교육, 친구를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대한민국 교육은 김누리 교수의 지적처럼 ‘파시즘’이다.

지난해 말 유네스코 교육위원회가 발행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Futures of Education)는 2050년을 바라보면서 교육에 대해 던져야 할 세 가지 핵심 질문으로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뽑았다. 우리나라 교육에 질문해 보면 중단해야 할 것, 바뀌어야 할 것은 너무 많은데 유지하고 계속해야 할 것이 하나라도 있을지 의문이다. 최재천 교수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5세인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에 쏟아붓는 시간이 약 20년, 인생의 4분의 1을 과열 경쟁 속에 희생과 투자만 한다.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들은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삶을 마친다. 살자고 하는 공부인데 주객이 전도되었다.”면서 지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고 현 교육시스템을 완전히 부숴버려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경쟁 교육을 없애려면 첫째, 대학 입시를 폐지해야 한다. 초중고 12년 과정을 마친 학생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형식적인 자격고사 정도의 시험만 치르면 될 것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대학 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은 시대다. 이제는 대학이 선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배움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곳이 한 개의 대학일 필요도 없고 여러 대학, 또는 평생교육기관에서 내게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서열화된 대학의 간판을 따기 위해 반수, 재수를 반복하는 학원이나 취직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 전락한 대학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말 그대로 고등 교육기관다운 대학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대학 졸업장이 아닌 전공 이수증이 필요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스카이서성한으로 시작하는 대학 서열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무리 대학 입시를 다양하게 개선해도 경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학 서열 해소는 학벌 중심의 문화가 바뀌고 학력에 따라 차별하는 노동 여건이 개선되어야 가능하다.

둘째,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오래 전부터 학부모들은 일제고사 거부 운동을 했었다. 국·영·수 중심의 암기를 잘하면 좋은 성적을 받는 획일적인 시험으로 줄 세우는 획일적인 평가와 경쟁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답 맞추기 식의 결과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국·영·수가 아닌 예체능 과목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다양한 잠재력을 길러주는 곳이 학교여야 한다. 지필 시험만이 아닌 공연, 활동, 협업 등 과정 중심 평가를 시도한 것이 혁신학교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 가까워질수록 평가 시스템의 혁신은 입시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변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셋째, 다양화로 포장한 그들만의 리그, 특권교육을 없애야 한다. 교육은 부모 찬스, 경제력

과 무관하게 누구나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공공성’과 ‘평등성’이 핵심이다. 정권에 따라 존치가 오락가락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특별한 학생들만 선별해 특별하게 교육시켜 상위권 대학에 진학시키는 특권학교, 귀족학교다. 특권학교의 존재는 중학교,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교육에까지 영향을 준다. 학생 개인별 능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교육은 학교 다양화가 아닌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로 구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외고를 존치시키려는 근거로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고, 하나고 등의 교육과정이 특별하다면 모든 일반고를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 될 것이다. 헌법 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0세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넷째, 교원 양성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교육은 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철학과 관점으로 교육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므로 교대와 사대 입학 전형에 필수로 인성과 적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원 임용시험은 교육전문직에 걸맞게 최소 1년 정도의 현장실습 과정을 거쳐 직무 적합성을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공부’가 아닌 ‘교육’을 할 수 있다. 학원 강사와 교사의 차이는 자격증이 아닌 학생을 이끌어주는 ‘역할’에 있다.

전 세계가 지향하는 평화롭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려면 우리 교육은 완전히 ‘새로 고침’ 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이 교실 안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불신하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다면 이제 학부모들은 ‘학교 안 보내기 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미 학업중단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오디세이 학교, 몽실 학교, 신나는 학교, 은하수 학교 등 ‘일반적이지 않은’ 학교 밖 세상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은 비로소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이 특별한 경험을 ‘모든 학생들’이 ‘특별하지 않게’ 경험하고 누려야 한다.

말뿐인 ‘학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 ‘학생 영향 평가’를 필수로 거치고, 의사 결정 기구에 학생 위원을 50% 이상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자신의 선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결코 하루 아침에 ‘산업인력’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찍어낼 수 없다. 교육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어야 하고, 도구가 아닌 주체를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자.

경쟁교육은 사회문제로 규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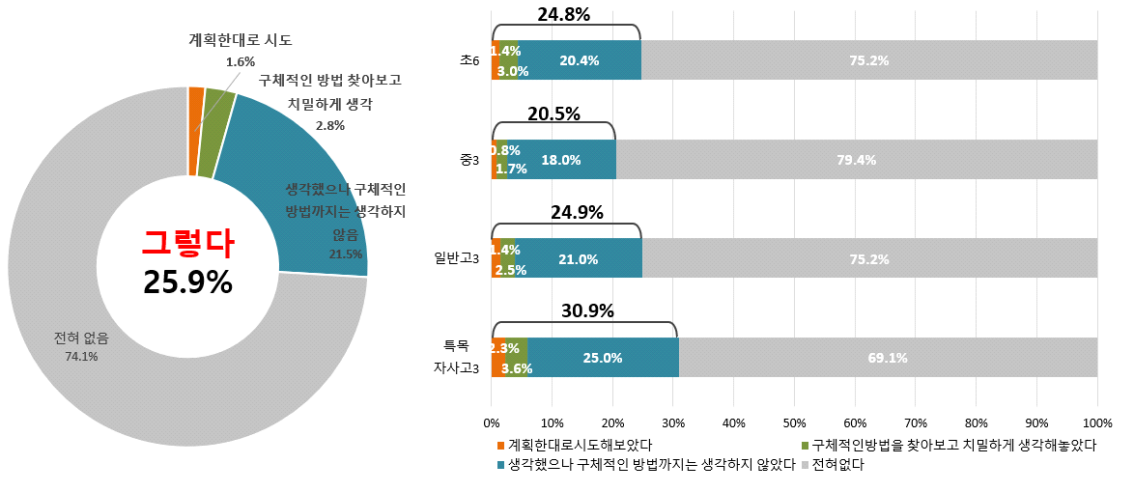
구 분 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최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만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 정책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빠르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온 나라가 분노를 토했고 정책을 발표한 장관은 사퇴했고 열흘 만에 교육부는 정책을 철회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범국민연대에 참여해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지 않는 졸속 정책 발표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해 얻은 나름의 성과이다. 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한 살 일찍 들어갈 때 교육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를 걱정한다. 대입경쟁과 취업경쟁의 신호가 영유아에게 까지 가중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과정은 그대로 두고 취학 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은 공포와도 같다는 것을 최근 만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 정책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쟁교육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조사가 최근 발표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유기홍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학생 5,176명, 학부모 1,859명, 총 7,035명 응답)’가 바로 그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한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성적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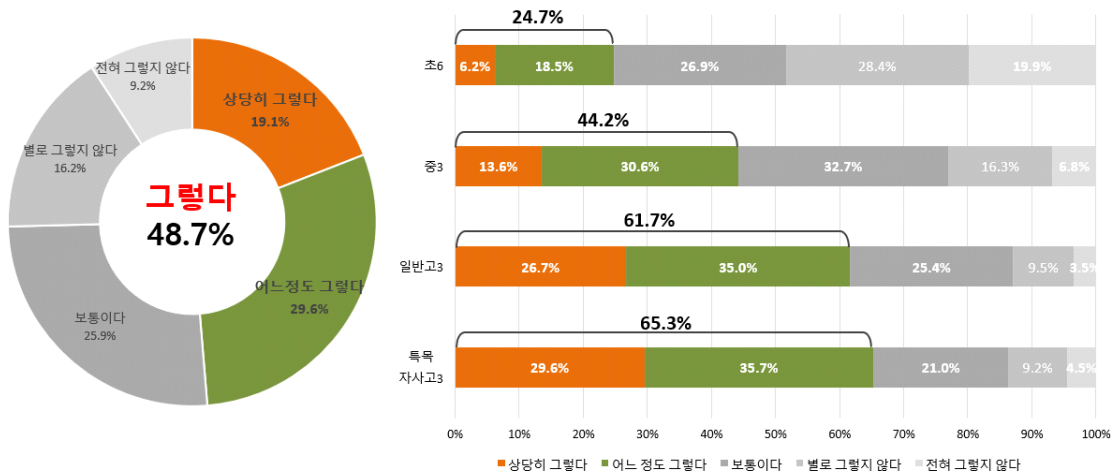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때문에 자해,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의원실(2022.07.)
전국 초6,중3,고3 학생 5,176명, 학부모 1,859명, 중7,0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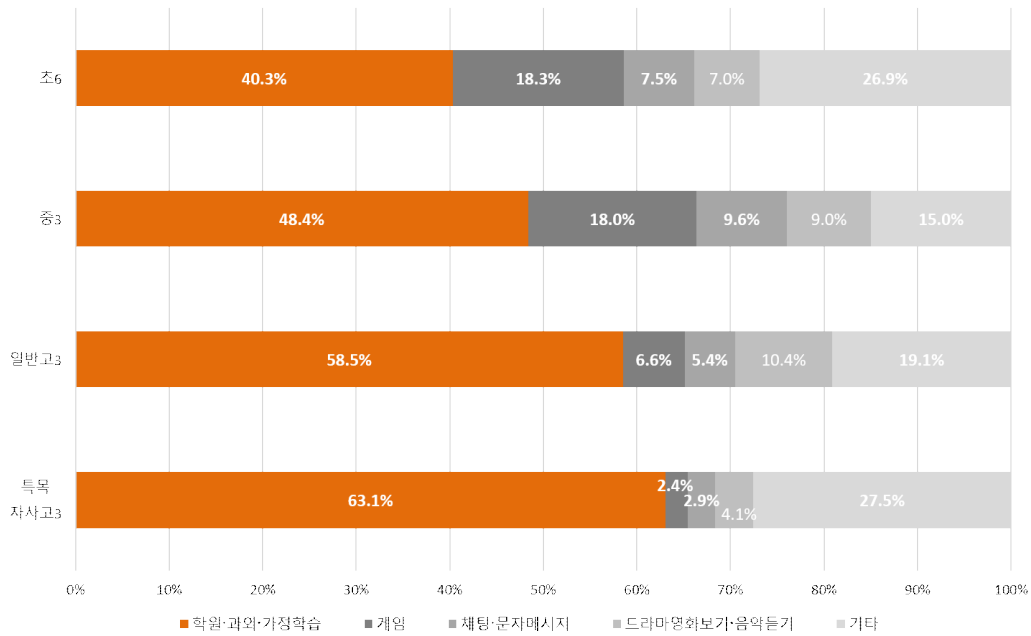
대한민국 청소년은 정서적으로도 위기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매우 낮다. 위의 조사에서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물어봤을 때 ‘잠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48.7%(초6 24.7%, 중3 44.2%, 일반고3 61.7%, 영재특목자사고3 65.3%)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져 수면의 양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이 부족한 이유는 학원·과외·숙제·인터넷강의에 시간할애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48.9%(초6 40.3%, 중3 48.4%, 일반고3 58.5%, 영재특목자사고3 63.1%)를 차지해 학습관련 시간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학생)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의원실(2022.07.)
전국 초6,중3,고3 학생 5,176명, 학부모 1,859명, 중7,0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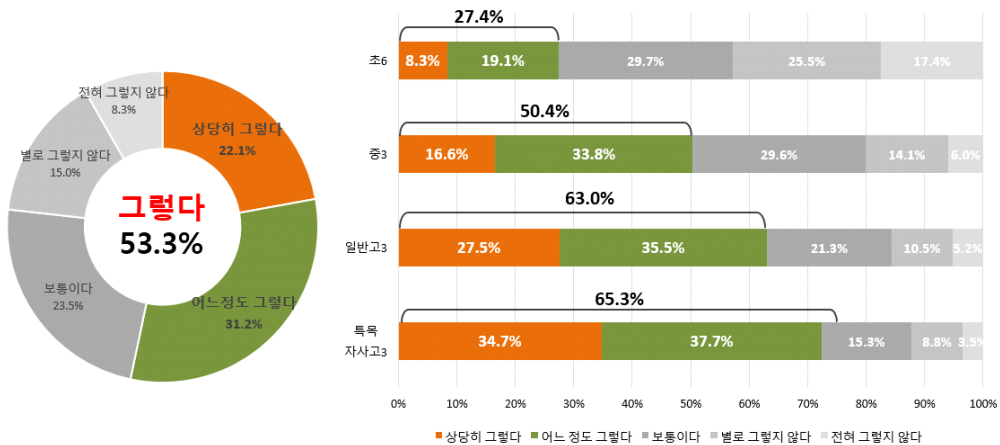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의원실(2022.07.)
전국 초6,중3,고3 학생 5,176명, 학부모 1,859명, 총7,035명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느냐는 질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전체 학생의 53.3%(초6 27.4%, 중3 50.4%, 일반고3 63.0%, 영재특목자사고3 72.4%)로 나타났고, 특히 상급학년이 될수록 학업과 성적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일반고3 27.5%, 영재특목자사고3 34.7%나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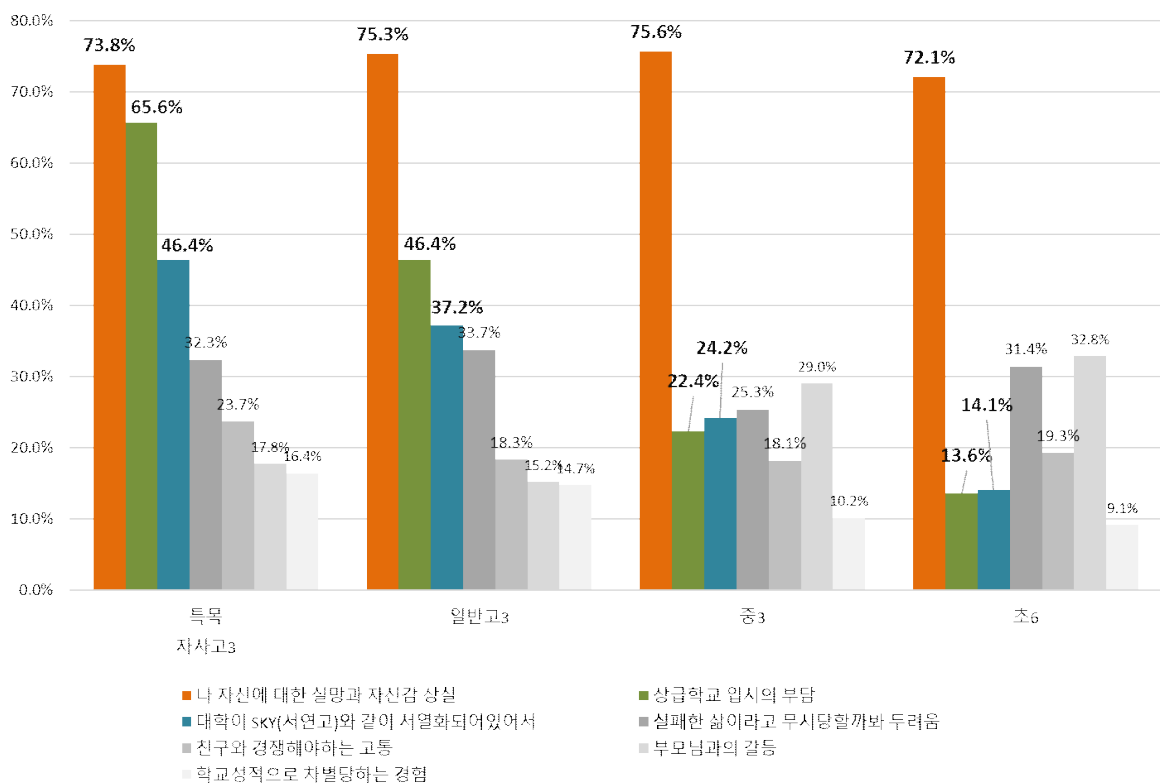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학생)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의원실(2022.07.)
전국 초6,중3,고3 학생 5,176명, 학부모 1,859명, 총7,035명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1)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을 꼽았으며, 그 외 고등학생들은 2) ‘상급학교 입시의 부담’, 3) ‘대학이 SKY(서연고..)와 같이 서열화되어 있어서’가 차례로 스트레스 이유를 차지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대학입시로 인한 학습부담 고통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학업 성적은 자아존중감의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령과 상관없이 많은 학생들이 학업성적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자신을 소위 루저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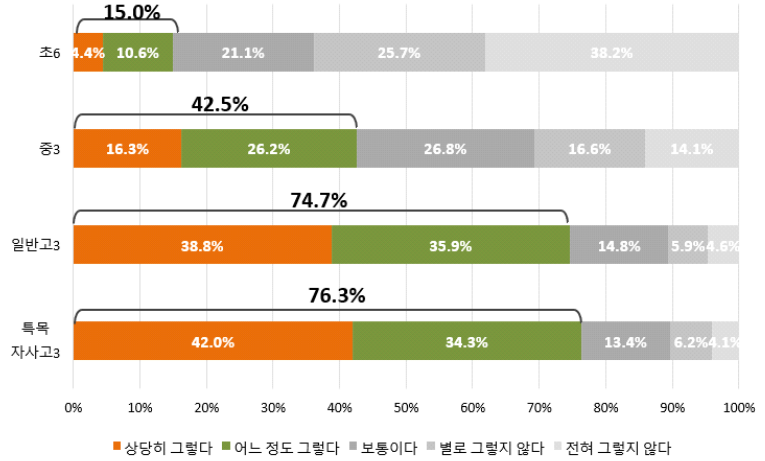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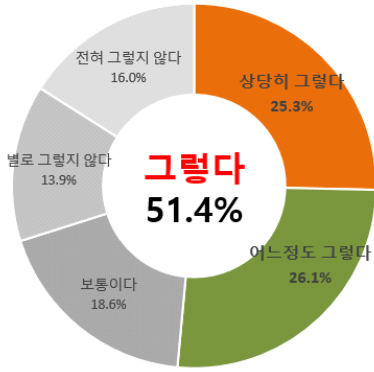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 (복수응답)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의원실(2022.07.)
 전국 초6,중3,고3 학생 5,176명, 학부모 1,859명, 총7,0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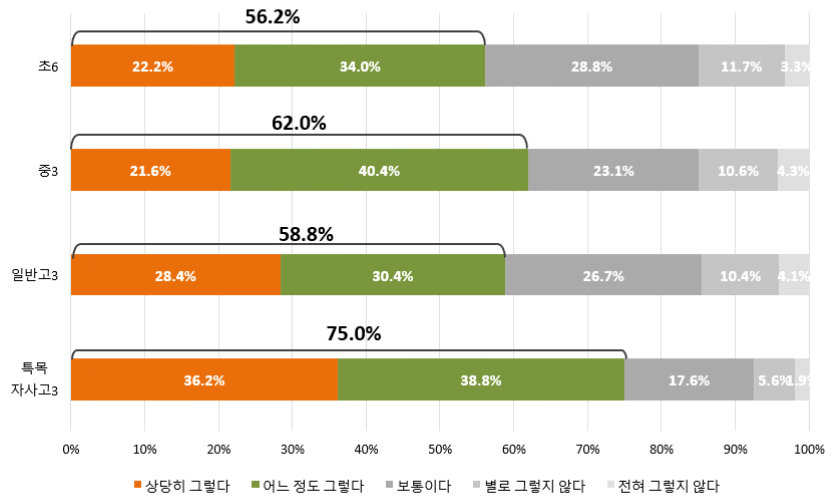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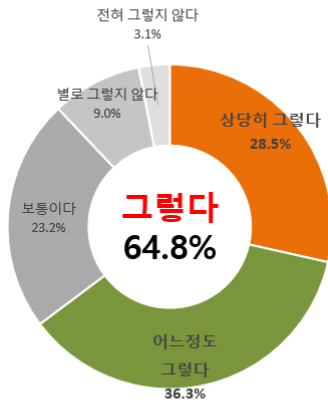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51.4%가 ‘그렇다’고 응답(초6 15.0%, 중3 42.5%, 일반고3 74.7%, 영재특목자사고3 76.3%)하였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경쟁교육, 대학입시로 인해 더 많이 고통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경쟁교육, 대학입시로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학생)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의원실(2022.07.)
 전국 초6,중3,고3 학생 5,176명, 학부모 1,859명, 총7,0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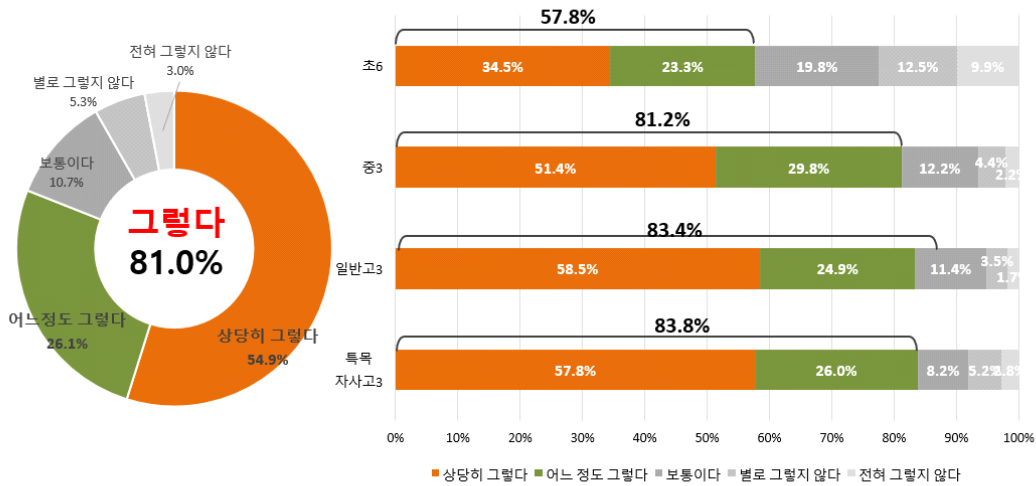
경쟁교육 대학입시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학부모)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의원실(2022.07.)
 전국 초6,중3,고3 학생 5,176명, 학부모 1,859명, 총7,0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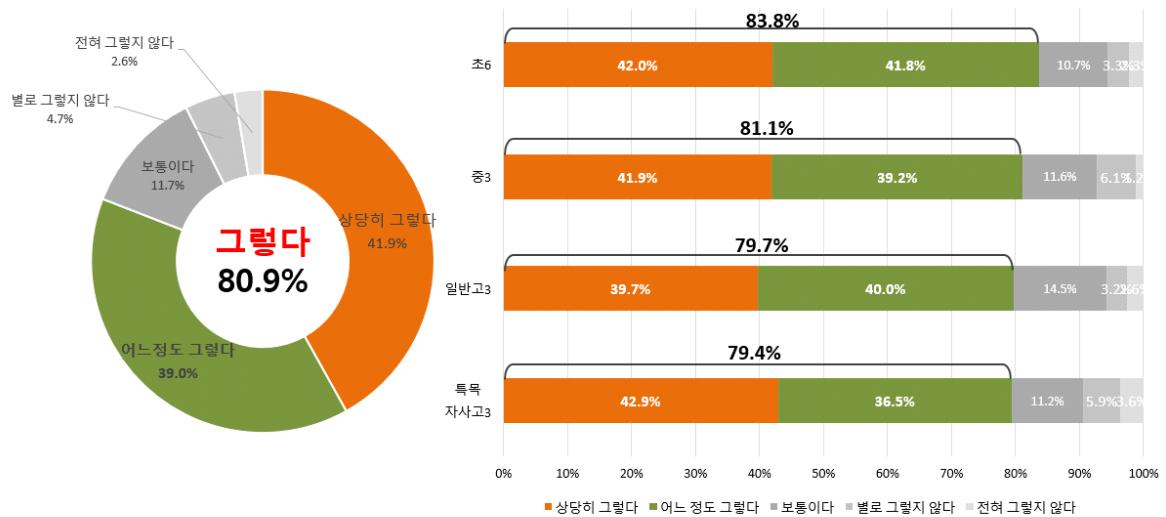
이같은 경쟁교육 고통을 학생 81.0%, 학부모 80.9%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학생)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의원실(2022.07.)
전국 초6,중3,고3 학생 5,176명, 학부모 1,859명, 총7,035명

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학부모)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의원실(2022.07.)
전국 초6,중3,고3 학생 5,176명, 학부모 1,859명, 총7,035명

국민들만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을 촉구한지 오래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의 아동이 과도한 입시경쟁에 노출되어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입시제도, 과도한 사교육 노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협약 당사

국으로서 십수년 째 이를 제도로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환경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당시 심의 현장에 참여한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3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경쟁교육 고통을 사회문제로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생각(통계청, ‘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하고 있으며,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제 국민의 염원을 국가가 수용하고 지표/지수 조사를 시작으로 문제를 정밀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정책과 제도로 추진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올해 출범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설 전문위원회, 아니면 교육부 산하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국가가 학생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 기구는 학생들의 행복, 스트레스 지수를 매년 조사하고 그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한 계획과 대안을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면시간, 여가시간, 학교 외에서의 학습시간 등을 지표로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조사한 데이터와 실태 등을 반영하여 국가 차원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정도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일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염원하는 경쟁교육 고통 해결을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 하겠다.